



계속되는 박근혜 정부의 여성 천대

사기성 생색내기를 하며 아동학대 비극을 악용 말라

▶ 관련 기사 11면

여성 노동자에게 씌워진 이중의 굴레를 더 옥죄지 말라

▶ 관련 기사 16면



사진 이미지 조승진

전략적 야권연대의
기초 원리 —
민중주의

8 ~ 10면

유가족 추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이호중 교수 인터뷰

2 ~ 3면

자본주의의
최신 국면 —
제국주의

12면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13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맞서

6면

유엔 대북제재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한국?

4면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이호중 특조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노동자연대 학생그룹·노동자연대 주관)가 2월 29일 연세대에서 열렸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가족이 추천한 특조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앞장섰고, 중대 재해와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기업살인법'을 오랜 기간 연구했다.

이 강연회에는 1백20여 명이 참가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대한 여전한 관심을 보여 줬다. 다음은 연설을 녹취·요약한 것이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반갑습니다. 벌써 2주기네요. 아직 많은 것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 작업은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끈질기게 싸우고 또 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참사”라 부르는가?

생존 학생들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다.” 해경이 한 명도 구조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경은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한 인명 구조 훈련을 평상시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침몰 사고에 대비해서 구조 활동에 즉시 투입될 인력들도 제대로 확보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커다란 배경 중 하나가 해양 구조 업무를 외주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구조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 훈련을 충실히 하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해경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선박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어선들, 상선들 불러 모아 배에서 탈출한 사람들 건져 올리는 것만 합니다.

2011년도에 수난구조법을 개정하면서 민간 어선들을 동원하고 이 어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켰어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임창수 해경 차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가 연간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해경은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122 구조대로 남겨 놓고는 평상시에 인명구조에 대비한 훈련도 하지 않고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 안전 점검이 기업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예요. 세월호의 선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 ‘배가 위험하

다’, ‘매일같이 과적을 해 왔다’라고 했지만 청해진 해운은 과적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선주 회사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법인인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자를 둡니다. 그러니 운항관리자들이 선박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운항관리자는 출항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지만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세월호가 출항을 할 때 안전 점검 기준으로 만재할수선(선박이 물에 잠기는 한계선)이 물에 잠겼는지 아닌지만을 판단했어요. 배가 떠난 다음에 선장이 승객 몇 명, 화물트럭 몇 개, 컨테이너 몇 개 이렇게 적어서 운항관리자한테 보내 주면 운항관리자는 거기에 그냥 사인해 출항보고서를 올리는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규제완화 정책입니다. 2009년도에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죠. 선박 개조시에 검사를 완화하고, 선장이 안전 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의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안전 점검과 관련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빼는 정책들을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계속 퍼 왔어요. 이런 것도 세월호 참사의 배경적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인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참사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패악과 모순들, 이런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사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유가족들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이를 위해서 특별검사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유가족들은 언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2월 27일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유가족들. 유가족과 4·16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성역 없는 조사·수사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든지 찾아오라.’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수색 대책을 내놓지 않으니 참사 며칠 후에 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고 맹목항에서부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진도대교 앞에서 경찰이 유가족들을 막아 섰습니다. 유가족들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 유가족들이 청운동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농성을 시작하자 경찰 차벽이 공공 둘러쌌습니다. 9월 2일 유가족들이 6백만 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용지를 전달하러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삼보일배를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세종대왕상 앞에서 막힙니다.

진실 규명 자체를 방해하는 행태도 드러나기 시작했죠. 국정조사 당시 국회는 청와대에게 1백85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딱 세 개, 그것도 별 영향이 없는 문건만 제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면담을 끝내 거부하고서는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사법체계

교란 운운하면서 ‘수사권, 기소권이 특별법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식의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1월에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얻어 내지는 못했지만 유가족 추천 3명, 국회 추천 10명(여당·야당 5명씩), 대법원 추천 2명, 대한변협 추천 2명, 이렇게 해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뒀습니다.

난항을 겪은 특조위 활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가족 추천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돼 있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에 조대환 변호사가 부위원장으로 왔다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7월 즈음에 사퇴를 했고 후임 이현 변호사도 얼마 전에 사퇴를 했죠.

특조위는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피해자지원소위원회로 세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는 각 소위원회마다 국(局) 조직을 두도록 요구를 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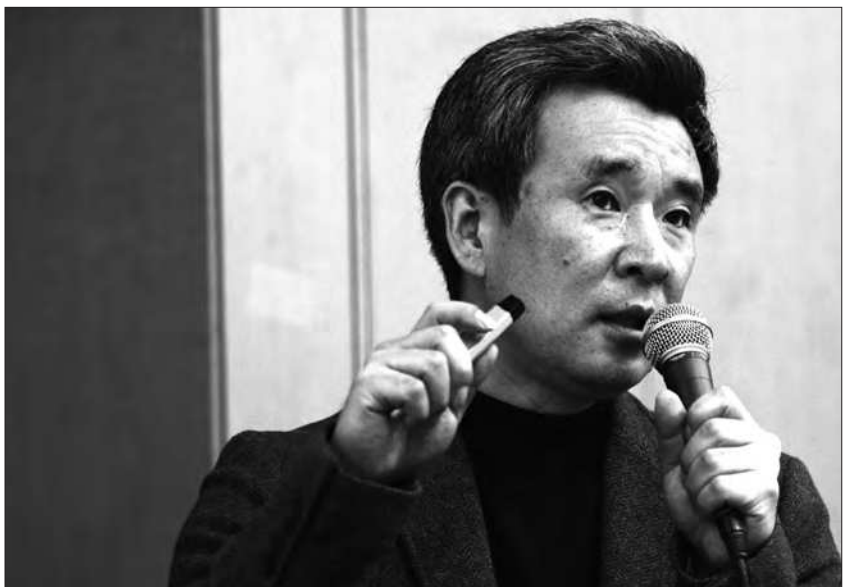
그런데 정부와 시행령 제정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축소되면서 진상규명소위원회만 국 시스템으로 가고 안전사회소위원회와 피해자지원소위원회에는 과(課)를 두게 되면서 직원 규모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특조위 조사 권한은 자료 제출 요청, 실지 조사, 동행 명령장 발부, 청문회 실시, 진술 조사입니다. 국회가 아닌 조사기관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12월 1차 청문회 때 해경 지휘부의 해경 본청 김석균 본청장, 김수현 서해(海警)청장, 김문홍 목포서장과 당시 상황실 근무들을 주로 불러서 증인 심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리한 질문에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특조위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조사를 보완해서 특검을 하라는 요구를 2월 중순에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해경 중에서 검찰 조사로 처벌 받은 사람은 목포 해경123 정장이 유일한데,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도 해경123 정장과 마찬가지로 지휘부로서의 제대로 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조위는 특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라든지 경우



함께 행동합시다”



기억과 연대 2월 5일 귀향 서명운동에서 한 유가족이 노란 리본을 서명운동 참가자에게 달아 주고 있다.

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특별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출석을 잘 안 해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영양가 있는 자료들은 잘 제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태료 정도로는 자료 제출을 압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석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 구속의 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찾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참사 당일 탑승을 했다고 알려진 2등 항해사 견습생이 있어요. 배가 기울어지고 침몰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이 뒤에 있는 무선 통화 장비 채널을 원래 맞춰두는 비상채널 16번에서 62번으로 바꿉니다. 이 견습생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인데, 출소 후에 찾지를 못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조위 권한의 여러 한계들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요구가 나온 배경

법에 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한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6개월 연장 가능, 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정부는 위원회 구성한 날이 2015년

1월 1일이라고 법 해석을 합니다. 특조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이 그 해 3월 9일이었어요. ‘위원회가 구성된 건 임명장을 받은 날’이라고 해석하면 3월 9일이 될 테고요. 시행령이 5월에 제정이 되고 나서 직원들이 들어오게 된 게 7월 말, 정부에서 예산이 나온 게 지난해 8월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갖춰진 때를 위원회가 구성된 날이라고 법을 해석하면 지난해 8월 즈음에 활동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임기는 1월 1일날 시작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문이 특별법에 부칙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부는 그 조항을 악용해 위원회 활동이 1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해석을 해요.

이미 정부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파견 명령을 올해 6월 말까지로 내려놔습니다. 예산도 6월 말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결국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최근 유가족들이 나서서 특별법 개정 서명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유가족들이 1주기를 앞두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시 시행령안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특조위를 파견공무원들이 장악하도록 한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여파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해 공작도 계속됐죠. 지난해 11월에 드러난 해수부 문건에는 특조위에

서 청와대를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면 전원 사퇴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여당 쪽 특조위원들이 전부 이 문건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특조위는 활동해 왔습니다.

진상규명의 과제

검찰 수사에 의하면 무리한 증문과 과적으로 복원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 미숙으로 대각도 변침[순간적으로 배의 방향을 크게 튼 것]을 했고, 여기서 화물 고박[고정해서 묶는 것]이 부실했기 때문에 화물이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돼서 침몰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타 미숙으로 조타기를 끝까지 돌렸다고 하더라도 배가 한 순간에 복원력을 상실하는 사태는 생기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비판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나온 항적 기록만 해도 세 가지가 있는데 세월호가 어느 항로로 갔는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소위 급변침을 하기 직전 30초 정도의 항적도 기록이 없어요. CCTV 영상 기록 장치의 문제나 실제로 세월호가 평형수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화물 적재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당시 해군 투입도 저지했고, 미군의 지원도 거절했고, 민간 잠수사 잠수도 일단 제지를 했죠. 왜 그랬는지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청문회 때 드러났지만 잠수사 5백 명을 동원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경 123 정장이 왜 선수로 가서 선원들만 구조했던 것인지에 관한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

다. 세월호 내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 사항’ 문건을 보면 점점 항목이 1백 가지가 넘습니다. 국정원이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 보안 점검 한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다 따지지 않거든요. 뭔가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였는지 아직 모릅니다.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는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실 규명 운동의 의미

국민의 안전, 생명을 도외시한 채로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자본의 탐욕이 세월호 참사 한 건에 있었습니다. 또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국가와 정부의 무능함과 규제 완화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최소한도의 제도적인 장치마저 해체해 버린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세월호 참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실 규명 과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되돌아보고,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1993년도에 제정된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보면 기업의 안전 업무에 관한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 기관에게 위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요. 안전 업무가 비용 절감의 논리 속에 빠지면서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고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의 책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세월호 참사 구조 작업에서 논란이 된 ‘연단’이라는 업체가 [정부 기관과] 유착 관계가 있냐는 문제를 떠나서 구조 구난 업무 자체를 민영화하는 시스템을 계속 가져 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보입니다.

안전한 삶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정부가 안전을 보장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무한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자본의 탐욕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구조화되면서 안전 업무를 계속 외주화·민영화 시스템으로 밀어내는 정책들을 써 왔던 거예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의 탐욕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여 온 것, 이것을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안전한 삶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지하철 노조가 시민 안전위원회를 요구해 온 것이나, 노후 원전 폐쇄와 탈핵 같은 시민사회 운동의 요구들을 안전이라는 가치로 엮어낼 계기가 세월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기업살인법 제정, 규제완

화 정책의 폐기, 노동자 안전권 보장, 유해 화학물질의 투명한 공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안전관리시스템 —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제로 설정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권자이고, ‘안전한 삶’이라는 권리는 ‘자본과 정치 권력의 동맹’에 대한 저항의 권리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운동의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폭력과 저항

세월호 참사는 국가폭력의 일환입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의 구조적인 폭력성이 증대되고, 그 폭력에 저항하면 가차없이 물리적인 경찰 폭력이 작용하는 것을 오늘날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물대포와 차벽으로 응수했던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종북 매카시즘과 더불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건전한 시민의 삶’인양 하며 시민들의 저항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법치’가 작용합니다.

민중총궐기는, 자본의 탐욕과 여기에 동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시민들이 연대하고 저항하는 것을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억압하는지 보여 줍니다.

기억합시다. 첫째 세월호 참사는 자본과 국가 권력의 동맹이 시민들의 안전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둘째,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라’, ‘인양 후 선체 조사를 보장하라’, ‘방해 공작을 중단하라’ — 이런 요구들을 유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갑니다. 셋째,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합시다 —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자’, ‘노동자 작업 중지권과 같은 안전권을 보장하라’, ‘유해 화학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시민들이 안전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시스템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넷째, 그런 요구들을 하는 순간 우리는 경찰 폭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집회 시위의 자유, 물포와 차벽을 넘어서는 민주주의를 같이 외쳐 주십시오.

녹취 박충범, 정리 김지윤

당부의 말

4월 총선 후, 6월에 20대 국회가 처음 열리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임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국회에는 국회 원구성하고 끝나요. 그리고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갑니다. 지금 임시 국회는 3월 10일까지로 돼 있어요. 임시 국회가 끝나면 19대 국회는 마무리 되는 걸로 봐야 합니다. 그때까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되면 6월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밀어붙여야 하

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6월 국회에서 법 개정의 결을 못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2주기 전후로 해서 힘을 모아야죠.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광주도 진상규명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1988년

도 이후잖아요. 세월호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당장 성과를 내진 못하더라도 기억과 연대의 과정들이 쌓이면서 힘이 축적되고 외화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거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인양 과정을 감시하려는 걸 정부가 거부해서 가족들이 [침몰 장소에서 가까운 섬] 동거차도에 천막을 치고 망원경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밤에만 인양 작업을 하고 아침이 되면 배가 나갑니다. 인양 작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건져 냈을 텐데

어떤 물건들을 발견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가족들이 특례 입학과 의사상자를 요구한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왜곡된 생각들을 불식시켜 주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에 있어요. 피해자들은 그냥 슬퍼해야 하고, 정부에서 뭐가 거기에 대해

서 보상을 하면 고마워해야 하고, 나서서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깨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의 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내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무엇을 할지 같이 고민하고,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해 나가는 것들이 쌓이는 게 결국은 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구실을 여러분이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년 3월 키리졸브 훈련 모습.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김영익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서맨서 파워는 이 초안이 “20여 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노동자 연대》 168호를 제작하는 3월 1일 현재, 2일 새벽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분명,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은 기존 결의들보다 제재 수위를 높였다. 대표적으로, 처음으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그리고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화물을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색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밖에도,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대다수 조항이 권고에서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다.

물론 제재의 강도가 강화됐다고 해서, 제재의 효과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북한을 위기로 내몰 정도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한·미·일의 독자 대북 제재와, 대규모 군사 훈련 같은 군사적 압박 강화와 함께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악화시킬 요인임은 분명하다.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

그런데 일각에는 이번 미·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 쪽으로 퇴로를 놓기로 담판을 지었다’는 평가가 있다. 제재의 목적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

러내는 것’이라는 데에 미국과 중국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이다(평화네트웍스 정육식 대표).

게다가 미·중 외교장관 회담 일정 때문에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미뤄지자, 한국이 미국의 의중과 무관하게 대북 강경책을 밀어붙이다 미·중 간 대화 결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박근혜는 한국이 “이 문제의 당사자”라며 “우리가 선도”해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지만, 분명 미·중 간 사드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소외돼 버렸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함께하는 줄 알고 지붕 위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외쳤는데, 오히려 미국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치우고 옆 사람인 북한과 대화하고 있었다(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는 주장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못 된다.

미국은 기존의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나 남북 간 충돌 같은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존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말이다.

미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 정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북한이 핵실험 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수도권 상공(그리고 중국 코앞!)에 B-52 전략 폭격기를 띄웠다. 게다가 얼마 전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Ⅲ’의 시험 발사를 잇달아 공개했다. 이 시험 발사가 단지 북한만 겨냥한 것일 리 없다. 미 국방 차관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에 미국이 효율적인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북한 핵실험 직후 박근혜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상황을 한·미·일 동맹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

또 다른 일각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결의안 동의 때문에 사드의 한국 배치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수년 전부터 미국이 한국에 계속 요구한 일이었고, 이번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 정국에서 진전을 이뤘음을 봐야 한다. 박근혜 정

부는 최근까지 “3노(3 NOs: 사드 배치에 관한 요청·협의·결정 없음)”를 공식 입장으로 내세웠지만, 이제 사드 배치는 공론화돼 논의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2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 존 커비는 “미·중 양국 간의 대화 및 합의, 사드 한반도 배치시의 잠재적 효율성에 관한 한미 간의 협의 그 두 사안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말했듯이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 논의도 필요 없을 텐데 불행하게도 북한은 다른 (반대의) 길을 선택했으며,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년 3월 1일치). 이 말은 북한 ‘위협’이 지속되면 사드 배치 논의도 지속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사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므로 미국은 한국을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시키려 계속 애쓸 것이다.

평화협정

이처럼 전략 무기 과시, 사드 배치 공론화 등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공세를 펼치자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존 케리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동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사실상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일부 진보·좌파들은 중국의 ‘평화협정’ 제안을 한국 정부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의 제안대로 대화 테이블이 열리더라도, 이 대화가 사태를 근본적으로 진정시킬 돌파구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됐던 9·19 공동성명과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9·19 공동성명은 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이 북한에 새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 사반세기를 돌아보면, 간간이 북미 간 또는 6자회담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파기해 다시 긴장이 높아졌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묶어 둔 채, 미국이 긴장을 완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책(한·미·일 동맹 강화, 전력 증강)을 그대로 추진한 것도 북한의 반발을 부르곤 했다.

따라서 현 상황이 진정되고 나서 미국이 위기 상황을 관리하려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그 대화의 앞날은 밝지 않다.

남중국해

1~2월 내내 한반도 문제를 놓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이 불거지는 와중에, 남중국해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었다. 2월 15~16일 미국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 캘리포니아에 초청해 아세안 국가들을 대(對)중국 포위에 끌어들이려 공을 들였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대응해 남중국해 섬들에 레이더·미사일·전투기 등을 배치했다.

그리고 한반도는 남중국해와 함께 제국주의 간 갈등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3월에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 연습이 미국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자극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남중국해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은 고조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동맹 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반대해야 한다.



반제국주의 노동자 운동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협상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글을 마감하는 3월 1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는 더 민주당을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반대 주장이 “괴담”이라고 깎아내렸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등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전국민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 잡듯이 뒤져 볼 수 있을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시민단체에 테러방지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 민주주의를 더욱 옥죄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하다.

테러방지법을 보면 국정원은 테러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의심” 만으로 누구나 “테러 위험 인물”로 규정해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범위도 SNS나 문자, 통화 내용, 금융거래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사상·신념이나 건강·성생활, 유전 정보 등)와 위치정보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매우 자의적인 기준으로 광범한 사찰이 가능한 것이다.

이미 국정원은 불법적으로 감청과 사찰을 하며 온갖 조작 사건을 터트려 왔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합법화해 주는 효과를 낼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자유주의자들이 우려하듯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사찰하고 탄압하는데 광범하게 이용되는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 약자들을 속죄양 삼고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데 활용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파리 참사 이후에도 국정원은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네 명이 테러단체를 추종했다며 공포감을 부추겼다. 그러나 국정원은 아직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님 말고 식 탄압이었던 것이다.

속죄양

이렇게 정부와 국정원이 근거도 없이 이주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며 공포 분위기를 부추긴 것은 노동계급의 더 핵심적인 부위로 공격의 칼날을 확대하는 데도 활용됐다. 국내 테러위험을 과장하며 부추긴 공포 분위기는 이후 정부가 11월 14일 총궐기를 “공권력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역대로 정부들은 자신들의 친 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테러 위험이 커질 때마다 이주노동자들을 마녀사냥 해 왔다. 2004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것 때문에 김신일 씨가 희생된 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몰며 마녀사냥 했다.

미국도 2001년 9·11 테러가 벌어진 이후에 테러를 막겠다며 애국자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테러는 오히려 늘었고 이주민들과 자국 국민들에 대한 탄압은 강화됐다. 이 법 때문에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내·외국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의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국의 〈가디언〉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의 불법 정보 수집을 폭로했을 때도, 영국 정부는 반테러법의 조항들을 이용해 탄압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진정

한 원인을 가리며 이주민 등 약자들을 마녀사냥하고, 지배계급에 맞선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악법이다.

또 지배계급은 경제위기가 심할수록 탄압을 억누르기 위해 민주주의 억압 조치들도 강화하려 한다. 그래서 1997년에 노동개약법과 함께 오늘날로 치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기부법이 동시에 추진된 것처럼, 지금 노동 개악과 테러방지법 함께 추진되고 있다.

국회 내에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동안 이를 지지하는 시민 필리버스터도 이어지고, 2월 22일 시작했던 테러방지법 반대 서명에도 나흘만에 28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 만큼 더민주당의 결정은 필리버스터를 지지하며 응원한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환멸을 주고 있다. 더민주당은 민주주의 쟁점에서조차 불철저한 자유주의 정당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 줬다.

사실 더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이 제시한 타협안도 테러방지법의 폐해를 막기에는 너무도 부족했다. 이종걸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국정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저항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의 핵심 폐해는 막기 힘든 안이었다. 테러방지법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완전 폐기돼야 한다.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며, 설사 통과되더라도 폐기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

테러를 진정으로 막으려면 테러를 낳는 진정한 원인인 제국주의 전쟁 지원을 멈춰야 한다.

정선영



정선영

테러방지법은 “테러 조작법, 인권 침해법” 2월 27일 4차 민중총궐기

권영국 변호사,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가 2월 20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시민혁명당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애초 서울에서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었지만,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의 경주 출마 소식을 듣고는 큰 망설임 없이 어려운 경주를 선택했다.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 진압의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꼴을 보아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 당시 권영국 변호사는 ‘진상조사단 조사팀장’이자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김석기는 참사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기는커녕 이후 오사가 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을 지내며 정권의 비호를 받아 왔다. 이런 김석기에게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경주에 있는 선거사무소를 몸소 찾아가 ‘진박 인증’을 해주기도 했다.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말뚝을 꽂아 놔도 당선한다는 경주에서 김석기에게 도전한 권영국 변호사의 선택은 지난 30여 년간 그가 걸어온 길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학 졸업 뒤 풍산금속에 취업한 권영국 변호사는 노조 설립을 주도하다 1988년 8월 해고됐다. 포기하지 않고 싸운 끝에 노조 설립에 성공하고 복직도 했지만 1989년 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되고 다시 해고됐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2002년부터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맡았다. 당시 38일 동안 파업을 벌인 발전 노동자들을 비롯해 정부의 탄압을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2005년 오랜 투쟁 속에 이주노조가 설립된 후 지속된 정부 탄압 때마다 이주노조 간부들을 변호하고 노조 설립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다. 2008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6년 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노동위원장을 맡으면서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거리의 변호사’는 미국의 법정 스릴러 전문 진보적 소설가 존 그리섬의 작품 제목이다.

그는 소극적으로 법원에서 변론을 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투쟁의 현장을 찾아가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 주고 경찰 탄압에 항의하는 등 ‘확실히’ 노동자들의 편에 섰다.

‘신세계이마트 정상화 공대위 위원’, ‘쌍용차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주노조 합법화 소송대리인’, ‘화물연대 구속사건 변호인’,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인권침해감시단’,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소송대리인단’, ‘교사공무원 정당가입 사건 공동변호인단’, ‘삼성전자서비스 고 최종범 열사 대책위 공동대표’,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등 그의 이력은 모두 탄압받는 노동자

들과 청년, 빈민들의 편에서 싸우며 얻은 것들이다.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싸워 온 그는 연행과 재판(받은) 경력도 많은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듣고는 법정에서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라고 항의해 이런 경력이 추가되기도 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선거 도전을 결심했다고 한다.

“망연자실 울음을 터뜨리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보면서, 사법정의를 대해 그래도 가지고 있던 미련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 사법은 형식일 뿐, 그 내용을 채우는 건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사법정의를 대한 환상을 버리면서 새로운 정치적 모색이 필요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셈이다.”(〈오마이뉴스〉 2월 13일치)

그러나 무기력하고 원칙 없는 더민주당은 그에게 대안이 될 수 없었다.

“2014년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에서 … 어느 순간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면으로 제동을 걸어야 하는 부분조차도 절충하고 타협해서 … 질질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 … 기업활력특별제고법도 사실 재벌을 위한 법이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개선점이 있다면서 다 타협해 주고 심지어 테러방지법까지도 뭐만 빼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야당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기준을 세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거죠.”(〈장운선, 박정호의 팟짱〉 -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그런데 그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핵심 기반을 둔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보다는 급진민주주의 정당 모델을 지향하는 듯하다. 기성 정당들에 대한 날선 비판과는 다르지만, 노동자 정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특정 계급 계층만을 강조하는 정치운동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거길 들어간다고 해서 약간의 지지도가 높아지더라도 정말로 권력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세대교체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예를 들며 “조직되지 않은 시민의 온라인 참여”를 기초로 한 정당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시민혁명당’의 지향이다.

이런 지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전투적 노동자들의 지지와 모순돼 보인다.

이런 아쉬움에도 그의 선거 도전이 가진 의의가 퇴색하지는 않는다. 용산참사 책임자인 김석기와 박근혜의 노동자 탄압에 반대해 출마한 권영국 변호사의 도전에 응원을 보내자.

장호중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2월 26일 교육부가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있는 직후,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교육청에 내려보냈었다.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부당하다.

현재와 대법원 판례는 법외노조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인정한다. '노동법연구소 해밀'이나 '한국노동법학회'도 전교조가 “헌법상 단결체인 법외노조”의 지위를 가진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구 전공노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에도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이런 법외노조의 권리마저 인정하지 않으려고 최근에 전교조를 '일반 결사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진보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다. 그러면서도 직무이행명령이나 직무유기 고발 등 정부 압박을 의식해 동요하거나 후퇴하고 있다. 전임자 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압박에 동요하거나 후퇴한다면 보수가 득세할 것이고, 그리 되면 진보 교육감들의 진보적 교육 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전임자 복귀 거부 저항은 기층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지난 2월 18일 전교조는 “교육부 부당 조치 거부, 노조 전임 사수” 투쟁을 선포했다.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를 거부하기로 하고 “무도한 정권이 전임자들을 해직시켜 교단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정부 탄압에 맞서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결정은 지지받아 마땅하다.

지금 정부는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으려고 전임자 복귀를 매우 중요한 후속조치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도부가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한 것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 저항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것은 기층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반대로 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전임자 복귀 거부를 최소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조합원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래서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전임자 복귀 거부 최소



전교조

를 주장한 것은 부적절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문제는 정치적 성격이 두드러진 쟁점이다. 따라서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 시즌에 주요 정치 의제로 부각시켜 사회 전체를 논쟁에 휘말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있어야 한다. 저항 의지와 운동이 없

는 노동조합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 전임자가 복귀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은 기층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다.

전임자 복귀 거부 최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법외노조 이후 전교조가 투쟁적 방향이 아니라 참교육 실천을 향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참교육 실천은 사회 변화를 바라는 교사로서, 조합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투쟁과 참교육 실천을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정권이 전교조의 저항 의지를 꺾어 성과급·교원평가, 교육 긴축,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등을 본격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는 것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물론 참교육을 지키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대다수 대의원들은 전임자 복귀 거부 투쟁을 지지하며 '법외노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힘찬 투쟁을 결의했다.



전교조

전교조 재합법화 전망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가 어떻게 법적 지위를 되찾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것은 교원노조법 폐지나 개정이나는 논쟁으로 표현된다.

교원노조법은 김대중 정부가 교원노조를 반대해 온 우익을 의식해, 교원노조의 형식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고 단체행동권을 부정한 악법이다. 정치 활동도 금지한다. 단체행동은 노동조합이 가진 힘의 핵심이다. 반대로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은 폐지돼야 마땅한 악법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전임 집행부 시절부터 공식적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김정호 집행부는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

원노조법 2조를 개정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려 했다. 2013년 한명숙 전 의원(구 새정치연합)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각각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은 '교원노조법 폐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개정 운동이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하는 요구를 하는 등 진보성이 있으므로 비판적 지지 입장을 취해 왔다.

변성호 집행부도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정의 범위를 이전보다 크게 확대했다. 교원노조법 2조(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확보, 쟁의 행위와 정치 활동 금지 조항 폐지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교원노조법 말고도 국가공무원법에도 집단 행위 금지 조항(제66조)이

있는 등 국가는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겹겹으로 봉쇄하고 있다.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40퍼센트가 교원노조법 폐지(와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 폐지) 수정안에 찬성한 것은 이 점을 의식해서였던 것 같다.

그럼에도 변성호 집행부는 교원노조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을 없애 교원노조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대의원대회는 변성호 집행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변성호 집행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한계가 있다며 그 운동에 거리를 두는 태도는 옳지 않을 것이다. 투사들은 협력적으로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을 건설하며 그 운동 속에서 전교조의 재합법화 전망을 토론하는 게 좋을 것이다.

재합법화의 동력 — 선거와 투쟁의 관계

많은 조합원들이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해 총선과 대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총선을 통해 국회 내 여야 세력 관계가 변하고 마침내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전교조 재합법화가 가능할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이는 완전히 틀린 얘기가 아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장본인인 박근혜가 청와대에 있고 새누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없다는 생각은 너무 당연하다.

이 때문에 선거를 통해 제도권 정치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실제로 법률적 측면에서 보자면 여소야대 국회와 비새누리당으로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도 37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법률 형식 이면에 작동하는 진정한 동학을 볼 필요가 있다. 즉, 1996년 12월에서 1997년 1월까지 전개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대중 파업이 전교조 합법화의 진정한 동력이었다.

더민주당은 지금까지 교원노조법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있다.

더민주당의 전신이 교원노조법을 제정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압박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전교조가 투쟁력을 더한층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시키다

2월 29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에 대한 집단 해고를 철회했다.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을 한 지 48일 만이다.

교육청과 영전강이 합의한 핵심 내용은 법원 판결 — 현재 영전강의 교육감 직고용과 4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직화와 관련한 2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전까지 4년 계약 만료 영전강의 신규채용을 허용한다는 것과 신규채용 시 일부 비용(4대 보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 연 2백 70만 원)을 학교가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제주 교육감은 영전강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해고는 대원칙”이라며 1백19명을 집단 해고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던 첫 교육감이다.

그러나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1월 13일부터 교육청 앞 노숙 농성을 끈질기게 이어 왔다. 해고 철회 서명 운동과 해고 반대 오체투지 행진도 했다. 민주노총은 영전강 해고 철회 성명을 발표했고, 민주

노총 제주본부장은 영전강 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옥중 단식 농성을 했다.

이러한 투쟁과 연대 행동이 제주 교육감의 강경 해고 방침을 철회시켰다.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투쟁을 지지한 많은 이들에게도 의미가 크고 기쁜 소식이다.

물론 법원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합의여서 법원 판결에 따라 영전강 고용(과 제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해고 철회 투쟁 승리의 경험은 다음 투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교육재정 삭감

현재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노동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방교육재정도 삭감했다.

이에 항의해 교육공무직본부가 4월 1일 파업을 예고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교육청에 교육공무

직법 제정,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정기상여금 쟁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투쟁에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은 학교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 왔다. 그런데 적잖은 활동가들이 영전강, 각종 강사들,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의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워 한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가 <노동자 연대> 167호에 쓴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를 참조하시오.)

영전강 같은 비정규직 교원 제도의 폐지와 이미 고용된 비정규직 교원들의 고용 문제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교육과 노동을 분리시켜 영전강의 해고를 당연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 안의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문제는 참교육과 분리되지 않는다.

서지애 전교조 조합원, 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김현옥 전교조 대의원

2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2016년 사업 계획에 대해 6가지의 수정안이 제출돼 새벽 3시까지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임자 복귀 거부 문제, 전교조 재합법화 경로 등에 대해 대의원들의 관심이 많았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 거부를 결정했다. 해직을 각오하며 저항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다. 이러한 지도부의 저항 의지는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고무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대의원들이 ‘중앙집행위원회(20명)만 미복귀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정부에 맞선 투쟁보다 주되게 해고자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대량 해고가 조직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조합 기구 보존을 염두에 둔 실용주의적 태도다. 그러나 전교조가 스스로 저항을 조직할 때 법외노조와 재합법화가 주요한 정치 의제로 될 수 있다. 이 수정안은 다수 대의원들이 반대에 부결됐다(2백36명 중 98명 찬성).

재합법화 경로를 둘러싸고 교원노조법 개정이나 폐지냐도 토론이 났다. 지도부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확보, 정치활동 금지와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단결권만 조금 확대하는 전임 지도부의 개정안보다는 개정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 안이었다. 이에 대해 신선식 대의원



전임자 복귀를 늘리자는 수정안이 부결돼, 전교조의 저항 의지를 보여 줬다.

이 ‘교원노조법 폐기,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 쟁취’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이 한계도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들과 연대해 민주노총 사업으로 힘을 받으려면 일반 노조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2백35명 중 94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성과급과 교원평가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투쟁은 법외노조 탄압 저지 투쟁과 함께 2016년 2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제출됐다. 정부는 지난해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더 악화시켰다. 이 때문에 지도부도 “2016년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투쟁의 새로운 국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투쟁 방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성과급은 학교별 균등분배로, 교원평가는 동료 평가 거부로 제출됐다.

이에 대해 정원석 대의원이 성과급의 중앙 반납/전국적 균등분배, 교원

평가 저지를 위한 전 조합원 총력 투쟁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성과급 차등성이 확대되고, 전교조 1인 분회가 38.6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별 균등분배에 내맡기는 것으로는 학교간·지역 간 불균등성을 해소할 수 없다. 성과급의 핵심이 차등성을 바탕으로 교사 간 경쟁과 분열을 부추기는 데 있는 만큼 중앙집중적 반납과 전국 균등분배가 우리의 전술이 돼야 한다.” 이 수정안은 부결됐다(2백35명 중 72명 찬성).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중앙 반납과 균등분배 전술을 제시하며,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열리던 그 시간에 서울역에서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집회를 조직하고 있던 것에 비춰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다.

교원평가에 대해, 조합원 개인의 의지에 맡기는 동료평가 거부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출한 전 조합원 총력 투쟁 수정안은 통과됐다(2백 34명 중 1백30명 찬성).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배동산 정책국장

“전교조와 학교 비정규직의 공동 투쟁이 참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교육재정 삭감으로 인한 공교육의 조건 악화는 비정규직, 정규직 교사 할 것 없이 단결해 투쟁할 때 풀 수 있는 문제다. 진보 교육감이라고 다 정부의 교육재정 삭감 공격을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의 공격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삭감 공격으로 이어지며, 혁신학교 같은 참교육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등 학교 현장을 악화시킨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영전강 노동자들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노동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전교조도 이것에 반대하면서 함께 단결된 투쟁을 해야 교육재정 삭감으로 인한 인력 감축 정책을 막을 수 있고, 정규직 총원도 가능하다.

사실 정부가 초등학교에 도입하려 했던 융합과학교육강사 제도를 막을

수 있었던 힘은 영전강 같은 비정규직 교원들의 집단적 투쟁에서 나왔다. 그런 투쟁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이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정부와 교육청에 학습시켰던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적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더는 해고됐다고 눈물 흘리며 그냥 현장을 떠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닌,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정부와 교육청에 집단적으로 당당히 맞서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봤으면 한다.

따라서 영전강 투쟁처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같은 학교 현장에 있는 전교조 활동가들이 연대하고, 공동으로 투쟁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참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요구 수정안이 심의보류되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점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요구안’이 심의 보류된 점이다.(2백19명 중 1백58명 찬성, 3분의 2 찬성 통과)

박근혜 정부가 교육 긴축 공격을 하고 있다. 무상보육 예산 전액 삭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 등. 그런데도 전교조 사업 계획에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었다.

그래서 나는 “교육재정을 이유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에 반대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투쟁에 전교조가 적극 연대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가 교육재정을 삭감하면서 40만 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때 정규직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투쟁에 무관심하다면 정부의 이간질에 빌미를 줄 수 있고 정부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도 약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의 반론이 나왔다. “학교 안에는 다양한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이 있다. 급식 노동자, 행정 실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요구는 지지한다. 그러나 강사, 영전강, 기간제 고용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임용고사 문제도 있고 교사들의 정서 부분도 있다. 현대자동차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와 다르다.”

노동계급의 단결이 아니라 직종에 따라 단결할지 말지를 선택하자는 편협한 관점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은 지지하고, 학교 비정규직 교원들의 고용 안정은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 내에는 이전부터 영전강의 고용 문제를 둘러싼 날카로운 논쟁이 있다. 그런데 나의 수정안에 영전강 고용 안정이라는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오해도 있었다. 영전강 문제에 발목 잡혀 전교조가 40여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한편에서는 영전강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영전강의 해고를 방어할 수 없다는 초등 교사들의 압력을 받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수정안의 부결이 전교조의 사회운동적 위신을 실추시킬 것을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 보류안이 제출됐다. 전교조 안의 토론과 논의가 더 필요하니 결정하지 말고 심의를 보류하자는 것이다. 2013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을 때도, 심의 보류안이 등장했다. 규약시정명령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리자 말자는 것이었다. 대의원대회가 결코 어려운 쟁점이라고 해서 논의·결정을 회피하면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심의 보류 결정이 전교조 조합원 다수의 의사라고 볼 수도 없다. 전교조의 총선 교육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 이상의 교사들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의했다. 초등 교사들도 60퍼센트 이상이 찬성했다.

비록 대의원대회는 결정을 못하고 나중으로 넘겨 버렸지만, 전교조 투사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에 반대하며 그들의 고용 안정 투쟁에 대한 연대를 적극 조직해야 한다.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최일봉

총선이 다가오자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략적 야권연대는 ‘민중주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집권 전략이다. 민중주의는 국민 가운데 한쪽밖에 안 되는 반민주적·비애국적 무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계급을 초월하여 단결해, 그 반동적 극소수를 권좌에서 몰아내자는 사상이자 운동이다. ‘반동적 극소수’로 지목되는 집단은 독재 잔당과 공안세력, 방전주의자, 재벌 등이다. 민중주의자가 즐겨 내놓는 구호는 “각계각층이 단결”, “국민과 함께하는” 등이다.

민중주의는 ‘포퓰리즘’이라는 외래어의 순화어 중 하나다. 다른 순화어는 ‘대중연합주의’이다. 대중연합주의는 최상위 엘리트 계층의 정치인이 마치

자신은 엘리트층의 정치인이 아닌 양, 심지어 엘리트층에 반대하는 체하면서 대중에게 영합하는 꼴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글에서는 뉴앙스를 고려해 민중주의와 대중연합주의를 구별하기로 한다. 즉, 민중주의는 진보 성향이고, 대중연합주의는 보수 성향인 것이다.

유럽에서는 경제 위기와 긴축 재정을 틈타 우익 대중연합주의 정당이 등장에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영국독립당(UKIP), 네덜란드의 자유당, 덴마크의 국민당 등이 그것이다. 이 당들의 핵심 정책은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로, 이 점에서 파시스트 정당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익 대중연합주의는 파시즘과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은 파시즘이 의회 민주주의와 모든 노동자 단체를 분쇄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2월 27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를 파업 투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민중주의는 제3세계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 글의 관심사는 우익 포퓰리즘이 아니다. ‘진보’와 민족 자주를 표방하며 활동하는 종류의 포퓰리즘이 우리의 관심사다. ‘진보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민중주의를 의미하는 말이 돼 버린 듯하다.)

민중주의는 외세의 지배와, 그와 결탁한 하층의 부패한 기득권층의 지배를 경험한 신흥국의 노동운동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제

식민지, 외세(미국과 소련)에 의한 민족 분단과 전쟁, 외세(미국)가 후원한 독재 정권과 재벌의 지배 등 한국 현대사의 관심사다. ‘진보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민중주의를 의미하는 말이 돼 버린 듯하다.)

민중주의는 흔히 진보적 민족주의 경향을 띤다. 진보적 민족주의의 핵심 강령은 남북한 화해 협력과 공극적 통일이다.

민중주의의 순차적 물결

민중주의 운동의 성격과 형태, 생존 능력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매우 달랐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러시아와 미국에서 민중주의 운동은 아예 농민에 기반을 뒀다. 제정 러시아의 민중주의 농민 운동은 나로드니키로 불렸고, 테러리즘 전략과 선거 전략을 결합해 추구했다.

미국의 민중주의 농민 운동은 경제 정책 — 특히 곡물 가격 문제와 재벌(conglomerate, 거대복합기업) 개혁, 은행 규제 문제를 놓고 수립되는 —에 영향을 미치려 애썼고, 민중당이 하 서양사학계에서 통용되는 인민당으로 표기)을 창립해 지역에 따라 민주당이나 공화당과 제휴했다. 1894년 철도 파업 이후, 인민당의 일부는 파업 투쟁으로 등장한 노동운동가들과 연계하고 나중에 다른 사회주의자들과도 연계해 미국 사회당을 창당한다.

러시아와 미국의 민중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을 앞뒤로 해서 일어난 거대한 노동계급 투쟁, 특히 러시아 혁명과 서구 혁명에 밀려 완전히 주변화됐다.

1930년대 대불황시기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시기

민중주의의 두 번째 물결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었다. 유럽의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민중주의는 **민중전선**(인민전선)이라는 가장 완성된 형태로 등장했다.

민중전선은 스탈린주의자들의 전략이다. 이 전략은 드러내놓고 친자본주의적인 정당과 선거로 연립정부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민중전선은 선거라는 면에서 보면 흔히 성공적인 방침일 수 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협력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은 노동자 운동을 고무하는 효과도 낸다.

하지만 노동자 투쟁의 수위가 자본가들의 우려를 자아낼 수준으로 상승할 것 같으면 민중전선은 노동자 운동을 억압하는 효과를 낸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국면에서 일어난 사회보험노조와 롯데호텔 노조 파업이 NLG계열의 싸늘한 방미를 받은 것이라든지, 이듬해 단병호 위원장이 7월로 예정된 민주노총 파업을 취소한 것, 그

리고 최근에 다수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총선을 의식해 새정치연합—더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공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현정조합원들은 동원해제 상태에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민중주의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의 집권 초기처럼 패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다. 페론은 주요 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는 강압적으로 노동조합을 국가에 통합시켰고,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찬양하면서, 파시스트 전범들의 아르헨티나 이주를 환영하는 등 모순투성이 정책들을 펼쳤다.

한편, 멕시코의 라사로 카르데나스는 집권 중이던 1938년 멕시코혁명당을 설립해, 멕시코 혁명(1910~1920)의 유산을 이어받는 정당임을 표방했고, 집권당으로서 트로츠키의 망명을 허용하는 등 매우 좌파적인 자세를 취했다. 트로츠키의 망명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도 거부하고 있었다.

라사로 카르데나스의 아들 파우테목

카르데나스는 1988년 당(멕시코혁명당의 후신인 제도혁명당)을 탈당해 야당인 새로운 민중주의 정당 민주혁명당 PRD를 설립했는데, 이 당은 이후 멕시코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됐다.

1949년부터 1979년까지

민중주의가 가장 성공적이던 시기는 민족 해방 혁명이 성공을 거두던 시기였다. 중국 혁명부터 쿠바 혁명과 베트남 혁명을 거쳐 니카라과 혁명과 이란 혁명에 이르는 1949년부터 1979년까지가 그랬다. (중국 혁명에 대해서는 이번 호에 실린 이정구의 ‘1949년 중국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를 보라.)

이 혁명들에서 노동계급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던 건 이란 혁명밖에 없었다. 이란 혁명에서도 민중주의는 초기에 노동자 운동을 자극했지만, 노동자 운동이 ‘쇼라’라는 민주적 노동자 권력 기관을 창출하며 이슬람 성직자(물라)들의 주도권을 침해하는 듯하자, 물라들은 노동운동을 억제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아예 분쇄하는 지경으로까지 나아갔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1994년 치아파스 주에서 봉기한 사파티스타는 최근의 민중주의 물결의 효시를 나타낸다. 사파티스타는 혁명적인 민주주의 세력이었다. 같은 해 남아공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이하 ANC)가 선거로 집권한 것도 민중주의의 쇄도를 알리는 사건이었다. 동시에, 지난 20여 년간의 ANC 집권은 혁명적인 종류의 민중주의조차 그 계급 협력주의로 인해 결국에는 개혁주의의 성격을 띠게 됨을 잘 보여 준다.

3년 전 작고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와 현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도 최근 민중주의 물결의 일부가 될 수 있고, 스페인 포데모스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 포데모스의 주요 간부들은 에르네스토 라올라우 등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이론에 근거한 민중주의를 지지한다.

그러나 중간계급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승진, 창업, 귀농,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에서 그냥 뿔뿔이 날으아가기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간계급은 반자본주의적 운동이 미칠 일부 영향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우려한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는 노동계급의 이익과 중간계급의 이익이 일치의 최근 사례다. 오를랜드의 오투파이는 답했지만 말이다. 거기서는 부두노동자 등 조직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오투파이 운동이 벌어졌다.



우고 차베스에 환호하는 베네수엘라 노동자와 청년들. 21세기 사회주의라는 말을 유행시켰지만 차베스 사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노동자 운동 안의 민중주의

한국 민중주의의 대표적 사례는 ‘자민통’ 계열(이하 자민통계), 참여연대 등 진보적 NGO들 그리고 정의당 등이다. 물론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기도 하다. 스탈린주의 운동인 자민통계는 좌파적 민족주의 경향의 일부 — 핵심적 일부 — 이지만, 좌파적 민족주의자가 모두 자민통계인 것은 아니다.(자민통계의 민중주의적 성격은 김인식의 글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정의당의 민중주의적 성격은 장호종의 글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쫓기를 보라.)

민주노총 내 국민파·전국회의·중앙파 등도 민중주의적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민중주의적 경향을 띤다. 노동운동 내의 민중주의는 남아공이나 브라질, 멕시코 등의 다른 신흥공업국에서처럼 **중간계급과 — 때로는 지배계급 일부와도 — 계급 연합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물론 노동계급은 중간계급의 일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간계급 가운데 특히 영세 소농이나 영세 노점상, 철거민, 빈민 등은 노동계급의 적이 아니다. 그들은 흔히 노동자의 가족일 뿐 아니

라. 그들의 일부는 얼마 전까지 노동자였다가 실직한 사람이거나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족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처지이기 쉽다.

그러나 **중간계급은 노동계급이 아니다**. 전통적 중간계급의 전형은 소자영업자인데, 이들은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자본가 구실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서 임금받는 노동자 구실을 하는 이중적 처지에 있다. 스스로 자산을 소유하므로 자본가들에게 동질성을 느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일하므로 노동계급에게 동질성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구 중간계급은 양대 계급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유동적이다. 오락가락과 유동성이 중간계급의 핵심 특징이다.

중간계급에는 이른바 ‘**신중간계급**’이 포함된다. 이 집단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등장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자본가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자본가는 자기 대신 사업장을 운영할 특별한 임금노동

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사업장 내에 경영직·관리직 등 관료층이 형성됐다.

이 관료층의 최상층은 자본가 계급과 뒤섞이게 된다. 반면 관료층의 최하층은 겉보기로는 노동계급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이 계층에는 매우 모순된 처지에 있는 각양각색의 인사들이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창출하고 체제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산적 구실을 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더 심하게 쥐어짜고 단속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계급투쟁이 일어나면 이 집단도 양대 계급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린다. **노동자 투쟁이 강력할수록** 이 계층 하층의 일부 사람들은 노동자 편으로 이질될 가능성이 커진다. 엥겔스는 1848년 혁명 중에 프랑스 “중간계급이 견해가 엄청나게 자주 바뀐다”면서 이렇게 썼다:

“프티부르주아지는 중재자 구실을 하며 비참한 역할을 했다. … 그들과 임시정부는 몹시 갑팔질받았다. 민사가 조용하면 할수록 정부와 프티부르주아지는 대 부르주아지 쪽으로 더욱 기울었다. 반면 상황이 격동하면 격동할수록 그들은 노동자 편을 들었다.”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관계 문제가 진정한 쟁점이다

지배계급이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중간계급의 일자리도 불안정해지고 복지 혜택도 감축된다. 게다가 노동자의 이웃 주민으로서 그들의 환경도 파괴를 당한다. 그래서 중간계급의 일부도 자본주의의 일부 효과들에 적개심을 품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간계급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승진, 창업, 귀농,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에서 그냥 뿔뿔이 날으아가기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간계급은 반자본주의적 운동이 미칠 일부 영향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우려한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는 노동계급의 이익과 중간계급의 이익이 일치의 최근 사례다. 오를랜드의 오투파이는 답했지만 말이다. 거기서는 부두노동자 등 조직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오투파이 운동이 벌어졌다.

조건이 된다. 그래서 중간계급은 보수적이기 쉽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이 중간계급의 더 많은 부분을 끌어당길 방안은 **계급 투쟁 역량과 능력을 심보 발휘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려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급 이해관계를 확고하게 추구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중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태도가 확연하게 준비되며 심지어 충돌한다. 민중주의자는 노동계급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고집하지 말고 중간계급의 이해관계와 조율하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노동운동 안팎의 민중주의자들은 지난해 봄 전면에 불거진 공무원연금 방어 문제를 회피하고 대신에 그 문제를 공적연금 강화 문제로 전환하려 했다.

결국 민중주의자는 **계급투쟁과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중주의자는 계급투쟁과 노

동계급 투쟁이 부각되고 노동계급이 운동을 주도하면 민중이 내적으로 분열될 것이고, 운동 쪽으로 포섭될 잠재력이 있는 다른 사회세력을 내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오히려 노동계급이 민중 운동에서 주도권을 발휘할수록 민중도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중간계급으로서는 사회적 권력과 집단적 힘과 규율을 갖춘 동맹을 갖게 된 셈이니까 말이다.

오히려 민중주의적 방식이야말로 민중을 이루는 계급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엔 민중을 단결시키지 못할 것이다. 민중주의자가 그리는 단결한 민중이라는 이미지는 이상화된 것일 뿐이다.

10면에 실린 김하영의 글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는 노조운동가들 민중주의의 이러한 약점을 잘 보여 준다.

민중주의냐, 노동자주의냐?

민중주의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민중 운동이 계급투쟁으로 분화되지 못한 낮은 단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노동계급 측에서 말한다면, **노동계급 의식 발전의 초보적 국면**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지난 몇 달 벌어진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하에서 노동계급과 민중이 자신감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자민통계뿐 아니라 국민파, 중앙파 간부들도 이제 “사회적 고립 자초할 총파업 얘기 그만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싸움을 하자며 민중총궐기를 강력히 제안했다. 이들의 생각을 잘 대변한 한 민중주의적 논평은 이렇게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의 줄어드는 동력, 사회적 고립, 정파적 사분오열, 산업과 기업에 따른 부문주의는 거듭 드러났다. ‘노조 지도부가 국회 일정에 매달리며 계속 파업을 미루면 서 동력이 사라졌다’는 좌파의 전통적 비판도 한상균 지도부의 1, 2차 선제파업을 거치면서 근거가 희미해졌다. … 파업의 동력이 충분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지도자들이] 계속 회피하며 그것을 사그라들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 민주노총의 부족한 동력과 사회적 고립을 볼 때 이 투쟁(민주노총 총파업)은 처음부터 승산이 높지 않았다.”

오히려 민중총궐기로 “저들(지배자들이) 결코 ‘진보파’로 상징되는 저항으로 계급 이해관계를 융합한다는 발상에 해당한다. 가령 공무원연금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듯한 부문에서 활동하는 노동운동가들 가운데는 공적 혁명 중에 프랑스 “중간계급이 견해가 엄청나게 자주 바뀐다”면서 이렇게 썼다:

“프티부르주아지는 중재자 구실을 하며 비참한 역할을 했다. … 그들과 임시정부는 몹시 갑팔질받았다. 민사가 조용하면 할수록 정부와 프티부르주아지는 대 부르주아지 쪽으로 더욱 기울었다. 반면 상황이 격동하면 격동할수록 그들은 노동자 편을 들었다.”

중총궐기를 추진했지만, 상반기 내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4월 말 선제 파업과 이후의 공무원연금 투쟁 때문에 그 안(案)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투쟁이 패배하고 7월 15일 민주노총 2차 파업이 존재감 없이 끝나자 민중총궐기안은 탄력을 받지 시작했다. 자민통계뿐 아니라 국민파, 중앙파 간부들도 이제 “사회적 고립 자초할 총파업 얘기 그만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싸움을 하자며 민중총궐기를 강력히 제안했다. 이들의 생각을 잘 대변한 한 민중주의적 논평은 이렇게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의 줄어드는 동력, 사회적 고립, 정파적 사분오열, 산업과 기업에 따른 부문주의는 거듭 드러났다. ‘노조 지도부가 국회 일정에 매달리며 계속 파업을 미루면 서 동력이 사라졌다’는 좌파의 전통적 비판도 한상균 지도부의 1, 2차 선제파업을 거치면서 근거가 희미해졌다. … 파업의 동력이 충분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지도자들이] 계속 회피하며 그것을 사그라들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 민주노총의 부족한 동력과 사회적 고립을 볼 때 이 투쟁(민주노총 총파업)은 처음부터 승산이 높지 않았다.”

오히려 민중총궐기로 “저들(지배자들이) 결코 ‘진보파’로 상징되는 저항으로 계급 이해관계를 융합한다는 발상에 해당한다. 가령 공무원연금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듯한 부문에서 활동하는 노동운동가들 가운데는 공적 혁명 중에 프랑스 “중간계급이 견해가 엄청나게 자주 바뀐다”면서 이렇게 썼다:

“프티부르주아지는 중재자 구실을 하며 비참한 역할을 했다. … 그들과 임시정부는 몹시 갑팔질받았다. 민사가 조용하면 할수록 정부와 프티부르주아지는 대 부르주아지 쪽으로 더욱 기울었다. 반면 상황이 격동하면 격동할수록 그들은 노동자 편을 들었다.”

혁명적 오솔길

그런데 대다수 노동운동가들이노조 쟁점들은 노동조합주의적으로 사고하고(때로 전투적일지라도), 더 폭넓은 정치 문제는 민중주의적으로 사고하는 식의 의식을 갖는 경향은 정지 투쟁과 경제투쟁의 역할 분담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개혁주의의 정당이 성장하기 쉽다. 개혁주의의 정당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형식적 원리에 순응해,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직접적 생활조건의 문제들을 다루고 개혁주의 정치인들은 개혁 입법 활동을 하는 식의 분업을 당연시한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정치 운동에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특히 파업 투쟁으로부터 나오는)을 사용하는 것을 선택 사항에서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에 민주노총 파업이 동원되는 게 어불성설로 취급되는 분위기를 설명해 준다.

이런 정서가 보편화되면 범죄파 개혁정당이 대세가 된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로 가는다름가거나 급진적 조류가 노동계급과 청년·학생 측에 형성될 수 있다.

특히, 노동자들이 민중주의를 학습한 효과로서 계급 의식이 향상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이 점은 엥겔스가 미국 인민당의 일부 투사들이 철도 파업 투사들과 만나다 사회주의 운동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것을 호모하게 보며 지적한 점이기도 하다.

민중주의의 진화 속에서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조류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 연대) 신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중주의의 일정한 진보성을 인정하면서도, 위에서 인용한 논평가처럼 기회주의적으로 그에 끌리지 말고 그보다 더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전망에 현신해야 할 것이다.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김하영

우리 나라 운동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민중주의는 “각계·각층”의 동맹을 중시하고, 노동자들이 계급 고유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것을 그런 동맹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히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은 노동계급이 약화됐고 따라서 예전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고 여기는, 매우 다양한 경향들과 잘 맞물린다. ‘민주노총은 조직률이 매우 낮아 계급 대표성이 없는 데다 대공장·공공부문 조합원이 다수이므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앞세워 다가오는 지배자들의 귀족노조 고립 프레임에 말려든다’는 주장도 그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를 “독재 회귀” 심지어 “파시즘”이라고 보는 것도 계급을 가로지르는 동맹을 정당화하는 근거다.

이런 민중주의가 2015년 투쟁에 미친 좋지 않은 영향을 잘 보여 준 대표적 사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태도였다. 노동운동 안에는 공무원연금 방어를 꺼리는 견해가 광범하게 퍼져 있었다. ‘민주노총이 그런 걸 방어해서 지지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노동자연대를 비롯한 일부 좌파들의 주장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4·24 총파업의 주요 요구로 포함됐지만,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은 그것을 ‘공적연금 강화로 대체하거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요구를 제기하는 데 강조점을 뒀다. 이것은 자기 조합원들의 조건보다 미조직 노동자들과 전국민의 조건을 더 배려함으로써 국민적(또는 민중의) 지지를 얻겠다는 민중주의적 발상이었다.

물론 ‘공적연금 강화’나 ‘최저임금 1만 원’은 중요한 요구다. 노동자연대는 이 요구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노동자들에게 고통 전가하기’ 공격의 최전선으로 삼고 있었고, 이를 지렛대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같은 더 광범한 공격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문제를 사실상 회피하는 태도는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심각한 약점으로 작용했다. 결국 공무원노조 이총재 집행부와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등의 ‘공적연금 강화’론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사실상 용인하는 배신으로 나타났고, 이는 상반기 노동자 투쟁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에 그들은 공무원연금 삭감분을 국민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합의라며 정당화했는데, 국민연금 강화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우리의 경고가 결국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노동뉴스>는 “공무원연금 삭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전제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얻어낸 정부는 이후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정부의 태도를 “먹튀”라고 요약하고 2015년 노동뉴스 16위로 뽑았다.

민중주의의 논리는 공공부문 정상화나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반대 운동에도 적용됐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



2015년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실질적인 파업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

안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 ‘공공적’, 즉 국민적 요구에 헌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노선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수용했다. 5월 말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상반기 노동자 투쟁의 상승세가 꺾였다면, 주요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협상과 수용은 9~10월 공공부문 투쟁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문제에서는 사실상 비정규직 관련 쟁점만 부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노동운동의 다수 지도자들이 이 쟁점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더민주당 등 주류 야당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규직·조직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쟁점은 지키고자 아등바등할수록 노동시장 이종구조화 또는 노동계급의 분절화를 악화시켜 노동운동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다. 가령, ‘쉬운 해고? 비정규직은 이미 손쉽게 해고되고 있다. 통상임금 정상화? 비정규직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는 식의 주장들을 흔히 듣다 보면, 조건 약화에 맞선 싸움이 정당한지 헷갈릴 지경이다.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쌓아 온 임금과 고용조건 지키기에 연연하는 ‘반대 투쟁, 저지 투쟁’을 할수록 고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노동운동 우파부터 좌파까지 공유하고 있다.

민중의 호민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민중의 호민관’, ‘조직 노동자만이 아닌 계급 전체를 위한 투쟁’이라는 긍정적인 미를 부여한다. 이런 정서는 심본 이해한다. 하지만 (선의에도 불구하고) 정착 나타나는 효과는 투쟁에 나설 잠재력이 있는 조직 노동자들의 동원을 회피하는 것임을 날카롭게 직시해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전

투적으로 벌이면서 다른 노동자 부문의 투쟁을 고무해야 ‘민중의 호민관’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중주의자들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방어를 위해 나서서 것 자체를 해롭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노총의 총파업 성사에 큰 열의가 없었다. 그들은 그 대신에 ‘민주노총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총파업을 하기보다 전략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과 이를 통한 의식과 조직의 성장 대신 ‘위로부터’ 개혁을 제안하는 셈이다.

계급 정치를 일관되게 추구하지 않은 다른 대표적 사례는 총파업을 민중총궐기로 대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민중총궐기가 중요한 전진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자민통 계열은 2015년 초부터 11월 민중대회를 적극 추진했고, 이를 세력 회복과 총선으로 가는 디딤돌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한상균 집행부도 7월 이후 민주노총 내에서 총파업 회의론이 강화되면서 점점 더 민중총궐기에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2015년 초 민주노총 임원 선거 직후에는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진이 ‘총파업 투쟁’을 가장 주되게 표방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고 당선했다는 점을 자타가 인정했다. 그래서 선거에서 ‘준비된 투쟁’을 주장했던 상대편(국민파-중앙파-전국회의 연합선본)도 초기 몇 달 동안은 총파업을 공공연히 반대하지 못했다. 그러다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4·24 총파업을 전후해 상승하던 기세가 꺾이고 7·15 파업이 급조돼 미미한 수준에 그치자, 총파업이 효과 없고 소모적이라는 종래의 주장이 확산됐다.

총파업 할 역량이 안 된다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에는 총파업 같은 전통적 투쟁 방법이 이제 낡았다는 생각도 깔려 있었다. 가령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김태현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외쳤지만 위력적이지는 않았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노총의 투쟁 형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투적 투쟁이 비정규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리는 선도자 역할을 담당했던 … 그 시절의 향수에 기반하고 있다. …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다. 자본이 초국적화되고 고용이 분절되며 파편화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전투적 투쟁이 쉽게 전면화되기는 어렵다.”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총파업 투쟁을 외치기보다 비정규직 조직화와 비정규직 투쟁의 근거지 구실을 전략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력 약화, 법제도적 제약, 비정규직 노조의 취약성 등으로 파업이 가능한 조직들이 제한돼 있다는 것도 총파업이 불가능한 이유로 언급되는 요인들이다.

사회적 연대

그러면서 흔히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하나는 범국민적 또는 ‘사회적 연대’ 투쟁이다. 1~2년 전부터 사용되는 “국민파업”이라는 용어도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했다. 이런 투쟁은 ‘파업이 가능한 노동자+파업이 불가능한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농민+빈민+자영업자+학생+여성 등등’이 모두 광범하게 연대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지만, 계급의 경계와 파업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 노동계급의 결정적 중요성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공장, 병원, 학교, 교통·통신 체계 등을 멈출 수 있는 집단적 힘을 가졌다는 데 있다. 자영업자나 학생 몇만 명이 일을 안 하거나 수업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효과를 내지는 못하며, 또한 노동자들 역시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투쟁이 “정치” 투쟁(반박근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보다 우월하고, 노동자 일부가 아니라 전체, 더 나아가 민중까지 포괄하는 투쟁이므로 민주노총만의 총파업보다 우월하다고

여긴다. 지난해 있었던 세 차례의 총파업보다 11월 14일 총궐기가 훨씬 더 위력적이지 않았느냐면서 말이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투쟁의 시동을 걸고, 노사정 야합에 항의한 9·23 총파업 같은 투쟁들이 있었기에 11월 14일까지 분위기가 뜨면서 총궐기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조직됐던 것이다. 오히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총궐기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뒤에도 가두 시위에만 힘을 실은 결과 노동자 투쟁은 더 이를 수도 있었던 전진을 하지 못했다. 그만큼 전진해야 박근혜의 ‘노동개혁’을 막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민중총궐기와 직결시켜 총파업을 조직했다면 어땠을까? 노동계급이 경제적·집단적인 힘을 사용해 실질적인 파업에 돌입했다면, 이윤을 위협하는 위력을 발휘하면서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에 확실한 제동을 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 박근혜를 한 방 먹이고 싶은 더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얻었을 수 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노동자들 자신이 계급 투쟁의 역량을 심분 발휘했을 때 연대도 확대되고 중간계급들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투쟁 수위를 낮춰야 연대가 확대되는 게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2013년 철도 파업 당시 ‘필공’ 파업을 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파업이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이 굳건히 장기간의 파업을 이어갔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물론 필공이 아닌 전면 파업을 했더라면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 이 글은 저자가 지난해 노동자 운동을 돌아보며 올해 초 노동자연대 대의원회의에 제출한 장문의 보고서의 적은 일부분이므로 서론과 결론이 없음을 독자는 감안하길 바란다.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박근혜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외쳤지만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은 삭감해 왔다.

사진: 노동자

정진희

지난해 말부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올해 초 한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죽게 만들고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보 관해 온 사건이 드러났다.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마구잡이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암매장한 사건도 드러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2월에는 경북 칠곡에서 22살 동갑내기 부부가 자녀 4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이들을 수시로 때리고 하루 한 끼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S신학대학교의 이아무 교수 부부가 중학생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구타해 사망케 한 후, 여러 달 동안 방치한 채 주변에 거짓말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 또 한 번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다.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 드러나자 박근혜 정부는 아동학대 강력 대책을 말하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피해 아동 실태를 파악하는 대책(초·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실태조사, 미취학 아동 및 병원 이용·예방접종 정보가 없는 아동 방문조사 등)이 여럿 발표됐다. 전담 경찰·검찰 인력 배정,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등이 제시됐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거듭 외쳤지만 최근까지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 문제는 한사코 언급하지 않았다. 2013년 경북 칠곡·울주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시행됐지만, 2014년 아동학대특별법 시행 예산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2016년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은 2015년 2백52억 원에서 무려 67억 원이 삭감됐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아동학대 예방 예산 삭감 문제를 부각하자, 며칠 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을 현재 1백85억 원 수준에서 내년 1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피해아동 보호 예산은 마

땅히 늘어나야 한다. 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 피해아동 치료와 지속적인 지원 등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시급히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 예방 예산이 워낙 낮아 1천억 원 수준으로 늘린다고 해도 피해자 보호에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 통계상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는 1만 27건으로, 2013년 6천7백96건보다 대폭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사후약방문

더 중요한 것은 피해아동 보호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 결코 아동학대 '예방'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와 실태 조사 계획도 사후약방문이지, 예방책이 될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턱없이 낮은 아동복지 예산을 늘릴 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선진국 클럽으로, 이하 OECD)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2.3퍼센트로, 한국은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에 그쳐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아동학대가 빈곤과 관련 있다는 연구가 많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강그리 무시하고 있다. 최근 자녀 4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22살 부부는 직업 없이 군청에서 주는 수당 등으로 생활하며 생계비 부족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푼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사후약방문격으로 호들갑을 떨지 말고 "관련 예산을 포함해 아동학대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정책 대안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이 내놓

은 대책도 박근혜 정부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아동 지원 예산만 강조했을 뿐 아동복지 전반의 예산 증액 요구는 없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모두 아동학대 사후대응에 주력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을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아래에서 설명됨) 경찰력 증원의 명분으로 삼으려고도 한다. 새누리당이 최근 낸 총선 공약을 보면,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계획을 제시하면서 아동학대의 "근본원인이 '가정'에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2019년까지 경찰 인력을 2만 명 더 늘릴 계획인데, 이 중 일부를 아동학대 전담경찰로 배정하려 한다.

아동학대의 근원

새누리당의 설명은 아동학대의 근원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라는 사실이 곧 아동학대의 본질적 원인이 가족 내부에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동학대가 주로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에 바탕을 둔 착취 체제라서 소외가 만연하고, 양육이 개별 가정의 사적인 일로 내맡겨져 있어서 부모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좌절된 일부 부모가 자녀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불평등과 아동학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OECD 나라들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회 총소득에서 하위 50퍼센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고의적 아동사망률'(학대나 살해로 인한 아동사망률)이 높다. 1인당 국민총생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영아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연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사적인 양육제도 등과 같은 핵심적 문제를 도외시킨 채,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아동학대 예방책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이 아동학대 문제를 가볍게 여겨 방관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주류 언론들의 얘기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모두 철저히 조사돼야 하지만, 신고를 독려하고 감시망을 강화한다고 해서 아동학대 발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미국은 아동학대 감시망이 발달해 한국보다 신고가 훨씬 많이 이뤄지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높지만, 그 때문에 심각한 아동학대가 줄어들지는 않

았다. 0~14세 아동 10만 명당 사망 원인을 국제 비교한 연구를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 깊은 '고의적 아동사망률'은 미국이 조사대상 30개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다(OECD, 2011). 미국에서는 아동 10만 명당 2명 이상이 학대나 살해로 인해 사망한다.

미국의 고의적 아동사망률이 OECD 30개국 중 1위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2009년 GDP 대비 아동가족 복지지출 수준이 OECD 소속 34개국 중 꼴찌에서 2위였다(꼴찌는 아동가족 복지지출이 전무한 터키). 미국의 지출 수준은 평균 2.3퍼센트에 한참 못 미치는 0.7퍼센트였다. 한국은 꼴찌에서 3위로 0.8퍼센트였는데, 한국이 '고의적 아동사망률' 상위 5개국에 속하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와 언론, 사용자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계기로도 이용하고 있다. 부모 교육 강화,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가 아동학대 대책으로 제시됐다. 경제 위기로 해고,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등 노동계급과 서민 가정에 더 많은 부담을 떠넘겨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양육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아동학대 대책은 가난한 부모를 속죄양 삼는 것이 되기 쉽다. 이미 서구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이용해 가난한 부모들이 사회 불안의 원천인 양 몰아가며 빈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 왔다.

소외와 불평등을 낳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며 거기서 혜택을 보는 지배자들이 아동학대를 해결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은 기껏해야 임기응변식 대책을 내놓으며 온갖 궤변으로 아동학대의 근원을 가리고, 사람들의 분노를 경찰력 강화나 사회 통제에 이용하려 들 뿐이다.

우리는 아동학대 사건을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경찰력 증원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데 반대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삶을 공격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아동학대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이윤 체제를 폐지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생산과 분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건설할 때 아동학대도 끝장낼 수 있다.

'김선숙·유민상(2012), "OECD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제16권 제4호.



노동자들의 삶을 공격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아동학대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하는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김종환

미국의 사드 배치 시도를 놓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지구 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그에 준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 즉 혁명적 노동자 운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와 연결시키는 정치적 분석이 필요하다.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제국주의 비판은 그 수단을 제공한다.

그런데 좌파들 사이에는 제국주의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 강대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소국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제국주의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국주의는 주되게 강대국과 제3세계 약소국의 관계에 관한 것이 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분석할 때 **강대국 간 경쟁**을 더 핵심적으로 여긴다. 이런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가 전(前)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과 무엇이 다른지, 즉 제국주의가 **매우 자본주의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전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들, 예컨대 고대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은 서로 무역도 하고 전쟁도 벌였지만 둘 사이의 경쟁이 각 제국의 운영에서 핵심적이어서 할 필연적 이유는 없었다. 반면 오늘날 제국주의에서는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 간의 경쟁이 핵심

동역학이다.

이런 차이는 자본주의에서 세계적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경향이 자본주의에서 자라났다는 점이 더 핵심적이다. 하나는 국가와 민간 자본이 갈수록 긴밀하게 통합되는 것, 곧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활동(판매뿐 아니라 생산도)하는 것, 곧 생산력이 국제화하는 경향이다.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는 두 경향은 모두 자본 축적의 결과다. 개별 자본은 이윤을 축적해 규모를 키울 뿐 아니라, 경쟁에서 밀려난 다른 자본이 가졌던 시장과 생산 설비를 흡수한다. 이 때문에 개별 자본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동시에 그 개수는 줄어든다(마르크스는 이를 각각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라고 불렀다). 그 결과, 한 나라의 경제력이 점차 몇몇 기업들에 집중된다.

그러나 자본의 축적과 성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업은 시장과 핵심 원료(석유 등)를 확보하려고 점점 더 국경 밖으로 뻗어 나간다. 그러면서 일국 내 경쟁은 줄어들 수 있지만 국제적 경쟁은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벌어진다.

그러면 이런 국제적 경쟁이 왜 시장을 통한 경제적 경쟁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으로 발전하는가? 이를 알려면 자본과 국가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자본주의는 지역과 나라 별로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러시아 혁명이 레닌을 이를 '불균등 발전'이라고 불렀다). 자본들은 이런 불균등 발전 속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지리적으로 한데 뭉쳐서 발전하는 것을 피하고,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구실이 중요해진다. 또한 많은 자본가들은 생산 설비와 상품을 지킬 무장력을 국가에 의존한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의 운영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국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하려 한다. 국가 운영자금의 원천이 있어야 피지배계급의 저항을 잠재울 수 있고,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가들과의 개인적 유착관계가 아니더라도) 국가 운영자들은 자본에게 좋은 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

이처럼 자본주의에서 자본과 국가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영국 마르크스주의자인 크리스 하먼은 이것을

'구조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불렀다.)

앞에서 자본주의에서는 기업 간 경쟁이 국제적 수준에서 치열하게 벌어진다고 설명했는데, 기업은 해외로 진출하고 해외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국 국가에 의존한다. 한편, 국가 운영자들도 자국의 경제력(권력의 바탕)을 키우고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의 경제적 경쟁과 국가 운영자들의 지정학적 경쟁이 맞물리게 되고 그 결과가 제국주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경쟁 논리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레닌은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평화주의가 아니라, 혁명적 국제주의에 근거해서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의 원인이 자본주의 자체인 만큼 그 해결책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에 드리운 열강 간 경쟁

시기마다 모습이 바뀌어 온 제국주의

제국주의를 구성하는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맞물리는 양상이 바뀌면서 제국주의는 시기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었다. 이런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제국주의 역사를 크게 구분한다.

첫째 시기는 1870년대부터 1945년까지다('고전적 제국주의'). 당시 영국·미국·독일·프랑스·러시아·일본 등은 경쟁 논리의 귀결로 영토 확장을 추구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삼은 것도 이런 과정의 일환이었다.) 제1·2차세계대전은 이런 경쟁이 자본주의 중심국들끼리의 전쟁으로 격화한 것이었다.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 모두 다극적으로 벌어진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다.

둘째는 1945~91년에 이르는 냉전

시기의 '초강대국 제국주의'다. 국가 간 경쟁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의 대결로 요약될 수 있었다. 이런 지정학적 대결 구도 때문에 경제적 경쟁이 여타의 지정학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체제 주변부에서는 대리전 양상으로 전쟁이 벌어졌다.) 서방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일본 포함)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서로 경쟁했지만, 소련에 맞서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의 아래 결집한 것이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경제적 경쟁은 여전히 다극적이지만 지정학적 경쟁은 양극적이라는 것이 '고전적 제국주의'와의 중요한 차이였다.

셋째 시기는 1991년 이래 오늘날까

지 이어지는 시기다. 냉전이 끝나자, 미국은 군사적으로 유일 초강대국이 됐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을 거치면서 과거에 누렸던 압도적 경제력을 잃은 반면, 독일, 일본, 중국 등 다른 경쟁국들은 빠르게 성장했다.

냉전 시기 경제적 경쟁이 지정학적 경쟁과 부분적으로나마 분리될 수 있었던 조건은 사라지고 두 경쟁 모두 격화할 여지가 커진 것이다. 그래서 냉전 직후 자유주의자들이 '자본주의가 승리한 덕분에 세계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떠벌릴 때,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장차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다극화하면서 세계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에 실제로 전개된 역사를 보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망이 옳았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제국주의

미국은 자신의 강점(압도적 군사력)으로 자신의 약점(경제적 경쟁에서 자신의 위상이 하락한 것)을 만회하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이 크게 의존하는 중동 석유에 대한 패권을 다지려고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라크에 안정적임 친미 정부를 세워서 중동 전역에서 영향력을 키운다는 구상은 완전히 실패했다. 미국은 중동에서 더 많은 군사적·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도 과거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처지가 됐다.

한편 미국이 이처럼 중동에서 허우적대는 사이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을 뿐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도 넓히려 한다. 중국 역시 자본주의 국가이고 그래서 체

제 논리의 산물인 지정학적·경제적 경쟁, 즉 제국주의 자체에 도전하기보다는 자국의 힘을 키워 장차 미국의 지위를 넘보려 한다. (당장 세계적 패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잠재적 경쟁자로 본다. 그래서 오바마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선언하며 아시아에 더 많은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일본·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짐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 한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처럼 미국이 패권을 지키려고 중국과 지정학

적·경제적 경쟁을 벌이는 것의 일환이다. 한반도를 안전하게 만들기커녕, 아시아 전체에서 제국주의 갈등을 격화시켜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더 높일 것이다.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 책갈피 | 400쪽 | 20,000원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서방세계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라고 생각한다. 1949년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됐고, 비록 1980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이기는 했지만, 마오쩌둥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공산당의 지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 사회의 토대는 1949년 혁명을 통해 형성됐고, 그 이후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중국 사회가 질적으로 탈바꿈한 적은 없다. 이런 이유로 1949년 혁명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된다.

혁명의 전사(前史)

중국 현대사의 권위자 중 한 명인 모리스 마이스너는 이렇게 썼다. “근대 중국의 혁명사는, 19세기 중반 실패로 끝났던 그리스도교 농민반란으로 시작되어 20세기 중반 마르크스주의자가 이끈 농민혁명의 성공으로 그 정점을 장식한다.” 중국 근현대사의 두 분수령이었던 ‘태평천국의 난’과 1949년 혁명의 공통점을 지적한 이 문장은 날카로운 통찰을 품고 있긴 하지만, 자칫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1925년 5·30 사건[상하이 조차지에서 경찰이 발포해 시위대 십여 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도 노동자 투쟁이 분출했다. 1927년 3월에는 노동자들이 상하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공합작을 유지하라는 스탈린과 코민테른의 지침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장제스의 쿠데타에 대비하지 못했다. 결국 혁명은 유산됐다.

스탈린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광저우, 하이펑, 루펑 등지에서 준비되지 않은 봉기를 일으키라고 지시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게 만들었다.

그 여파인 1927~30년의 백색공포로 도시 노동조합과 학생조직은 꺾일되다시피 했고, 농촌에서는 무자비한 살육으로 농민협회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토지개혁도 되돌려졌다. 당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

국민당 장제스는 권력 장악에 가장 큰 걸림돌은 당시 전쟁 중이었던 일본이 아니라, 공산당이라고 봤다. 그래서 그는 중국의 하북 지역을 넘겨주는 당고협정(塘沽協定)을 일본 제국주의와 체결하고는, 국민당 전력(戰力)을 남쪽으로 집중시켜 공산당을 섬멸하려 했다.

공산당은 ‘대장정’을 거쳐 산시-간쑤-닝샤 자치구의 변방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마오쩌둥도 시인했듯이, 중국공산당이 이 지역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1927~30년의 노동자 투쟁 패배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로 말미암아, 도시 노동자들에 기반을 둔 조직과 노동자 계급의 혁명 가능성은 현실에서 사라졌다.



1949년 중국 혁명은 위대한 민족주의 혁명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탄생의 계기가 됐다. 당시 베이징으로 입성하는 인민해방군.

결국 1940년대에는 국민당과 공산당 두 세력이 중원의 패권을 두고 경쟁했다.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고위관료와 군장성, 대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부르주아 정당이었고, 공산당은 변방의 연안을 중심으로 그 지역 농민에 기반을 둔 정당이 되었다.

1940년대에 중국의 이곳저곳을 둘러본 다음 미국 전쟁정보국(OWI)에 정보를 제공했던 그레이엄 펙은 “중국과 같은 사회에서 혁명은 근본적이며 매우 자연스러운 삶의 요소”라고 지적했다. 오랜 내전과 일본 제국주의 지배로 대중의 삶은 파탄났다. 1945년 일본 패망 후에도 사태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

국민당 정부는 항일전쟁 기간에 국가 경제를 독점하기 위해 화폐 발행을 늘렸고, 이것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1948년 옥수수 1소두(小斗)의 가격이 2월에는 12만 위안이었지만 10월에는 1천2백만 위안으로 올랐다. 1937년 물가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1947년 말에는 1천30만으로, 1948년 말에는 2억 8천7백만(!)으로 급등했다. 상하이에는 실업자가 30만 명이나 있었으며, 매일 6천 명의 피난민이 유입됐다. 장제스의 아들인 장징궈는 투기꾼을 단속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민당 정부를 지지하던 큰손들은 건드리지 못했다.

1949년 혁명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중국에서는 국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처럼 보였다. 당시 국민당 정부군은 4백 30만 명이고, 일본군 1백만 명이 남긴 무기를 전부 차지했으며, 인구 3억 명 이상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은 1945년 이래로 3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다.

반면 인민해방군은 병력이 1백20만 명이고, 군사력도 훨씬 뒤쳐져 있었으며, 외부의 원조도 없었다. 인민해방군이 장악한 지역의 인구는 1억 3천만 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장제스는 3개월 내에 중국공산당을 섬멸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반대로 3년 뒤에 국민당 세력이 철저히 붕괴됐다.

인민해방군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신념에 의해 움직였지만, 국민당 군대는 강제 징집병으로 이뤄져 있어서 위협으로만 대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민당 장교들은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만 매달렸으며,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의 급료와 식량을 착복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1949년 혁명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국민당 군대와 인민해방군이라는 두 정규군 사이의 전쟁이었다. 도시 노동자와 농민은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국가 경제의 파탄과 빈부격차의 확대, 국민당의 무능으로 인해 이들 대다수 중국인들은 끔찍한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산당이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고 여겼다.

1949년 혁명은 도시 출신 지식인들이 지휘한 농민 군대가 옛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일본과 서방 제국주의 권력을 축출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의 토대를 놓은 진정한 혁명이었다. 그렇지만 이 혁명은 노동자 대중의 자력 해방을 의미하는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었다. 찰리 호어는 이렇게 지적했다.

“1949년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의 마지막 결정적인 국면에서 미미한 구실을 했다. 상하이에서 20년 전에 장제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떤 주요한 파업이나 도시 봉기도 홍군[인민해방군]에게 길을 닦아 준 바가 없었다.”

공산당은 도시 가까이에서 진격하자 이런 명령을 내렸다. “생업에 종사하

는 노동자들과 종업원들은 일을 계속하고 영업은 평상시처럼 돌아가게 하라. … 국민당 관리들과 경찰관들은 자기 직무에 그대로 남아, 인민해방군과 인민 정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마오쩌둥 체제의 등장

1949년 혁명으로 중국 농촌에서는 지주 계급이 사라졌다. 그러나 혁명의 진정한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라 공산당 관료였다. 공산당은 토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전통적인 착취 구조를 일소하는 대신 농민들을 당과 국가에 직접 예속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한편 1949년 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유교적 가족 제도에 억눌려 있던 수천만 여성의 해방을 목표로 한 혼인법이 공표됐다. 혼인법은 수세기 동안 자행돼 온 아동 혼인을 금지하고, 최소 결혼 연령을 남자 20세, 여자 18세로 정했고, 축첩과 유아 살해도 금지했다. 이혼은 간단한 쌍방간 동의로 가능했고, 이혼에서 여성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았다.

하지만 1950~53년의 질풍노도 같은 분위기가 지나가자 가정 생활은 다시 전통적인 질서를 회복했고, 남녀 평등은 실현되지 못했다. 봉건적 가부장제와 온갖 악습들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당의 권위가 차지했다. 당은 사생활과 가정사에 깊숙이 개입했고, 배우자 선택에 정치적 기준과 출신 계급을 제시했으며, 부부간 불화의 조정에도 나섰다.

마오쩌둥과 그 후예들은 1949년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었다고 주장한다. 혁명에서 노동자 대중의 자력 해방이 없었어도, 공산당이 노동자 계급에 기반을 둔 정당이 아니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프롤레타리아 사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존재가 바로 혁명계

급의 존재를 증명하는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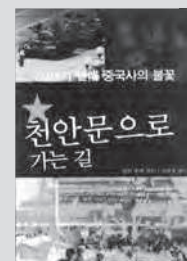
그러나 마르크스는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했지, 중국공산당처럼 의식이 존재를 결정한다고 보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를 물려받은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미국과 대만의 장제스 세력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압력과 경쟁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빨리 이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관료와 공장 경영자 그리고 군부 지도자들은 빈약한 자원으로 공업 기반을 건설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인간의 기본 욕구조차 자본축적이라는 목표에 종속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은 불가피하게 노동자·농민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됐고, 그 결과 하나의 집단적 계급을 이루게 됐다.

1949년 혁명 이후 벌어진 소련과의 갈등, 인민공사 건설, 대약진운동 등 급변하던 정책들은 바로 신중국 건설 과정에서 마오쩌둥이 직면한 모순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의 자력 해방은 조금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천안문으로 가는 길:
20세기 현대 중국사의 불꽃
찰리 호어 지음 | 책갈피 | 263쪽 | 10,000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박설

현대차 비정규직의 신규 조합원 가입 승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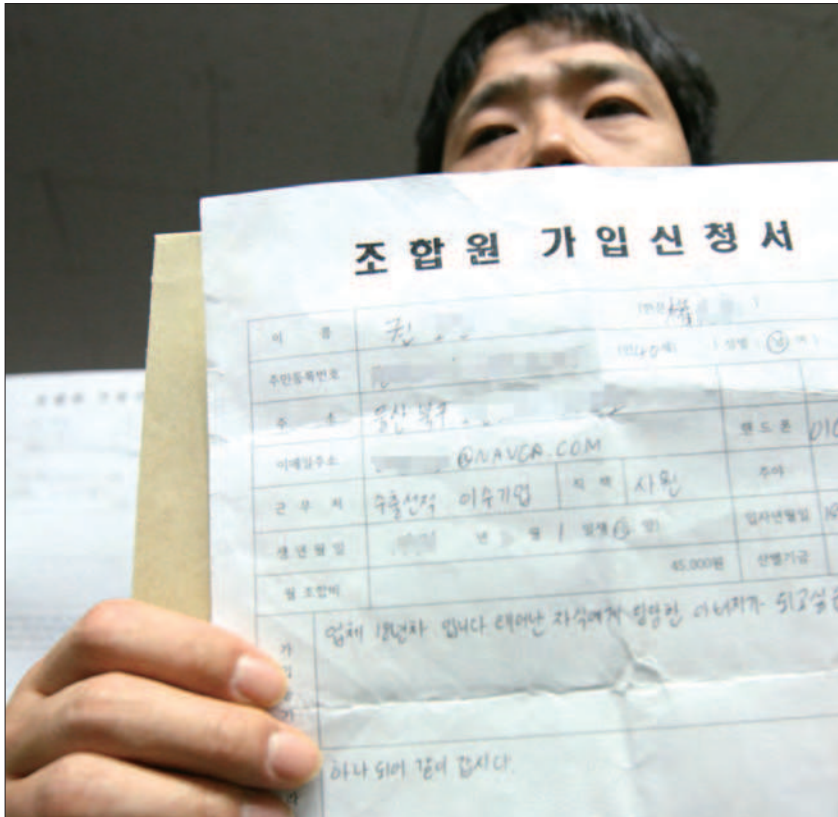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2백 50여 명은 지난 2월 2일 비정규직지회에 노조 가입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지회 집행부는 이들의 가입 승인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회 쟁대위는 2월 15일 '가입 시기는 불법파견 교섭과 투쟁이 일단락되는 시점으로 정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회로부터 가입을 거부 당했다고 느낀 노동자들은 2월 28일 금속노조 본조를 찾아갔다. 이날 상경한 1백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는 조합 가입을 즉각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규약·규정에 따르면, 노조 가입은 지회를 통해 받게 되지만 가입 거부를 판단할 때는 금속노조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가입 신청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비정규직지회 집행부는 쟁대위 결정을 거슬러 신규 조합원을 조직·지원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도 논의의 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 집행부가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데는 사측과의 신규채용 특별교섭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현대차 사측이 지난 몇 년간 추진해 온 신규채용은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그동안 일한 근속과 공정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사측과 정규직지부,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가 8·18 신규채용 합의를 체결했을 때,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합의를 전면 거부하는 올바른 입



단결의 힘 신규 조합원 가입은 사측을 압박할 더 큰 힘을 제공할 것이다.

장에 섰다.

이후 사측은 신규채용을 거부하는 울산 지회를 고립시키려고 탄압 공세를 퍼부었다. 안타깝게도 정규직지부도 신규채용을 압박했고, 지난해 초 금속노조 중집이 사실상 8·18 합의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투쟁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조합원들도 지쳐갔다.

부결

이 속에서 지난해 9월 지회 집행부는 근속을 일부 더 인정하는 내용의 신규채용 잠정합의안을 가져왔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64퍼센트의 높은 반대로 이를 거부했다. 그 결과 집행부가 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지만, 이들도 역시 올해 1월 비슷한 내용의 신규채용안에 타협했다. 그러나 조

합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2퍼센트의 반대로 다시 이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그런데 지금 지회 집행부는 두 차례나 신규채용안이 부결된 의미, 즉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되새기기보다 다시 신규채용 교섭을 해서 조합원들의 우선 채용을 약속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조합원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해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교섭에 차질을 빚어 기존 조합원들의 우선 채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노조 가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울 때 뒷집지고 있었던 이들이 뒤늦게 숟가락만 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원망도 자

리잡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 십수 년간 온갖 역경을 딛고 투쟁을 지속해 왔다. 신규 가입 신청자들도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여러분이 먼저 정규직으로 들어가시라. 우리는 그 다음을 노리겠다"는 말도 하고 있다.

사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서 노조 가입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9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1천1백79명 전원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직후, 공장 내에선 비조합원들의 노조 가입 문의가 줄을 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지회는 집단 조직화 사업을 할지 말지, 노조 가입의 조건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적잖은 조합원들은 '무임승차는 안 된다'며 조직화 사업에 반대했다. 집행부는 집단 조직화를 선언했지만, 조합원 자격 기준을 높이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속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회가 노조 가입의 문턱을 높이고 시간을 끄는 동안, 비조합원들에게 퍼졌던 기대는 금세 사그라졌다. 그 결과 조직화 사업으로 들어온 신규자는 80여 명으로 저조했다. 이는 상당히 뼈아픈 결과였다. 만약 지회가 법원 판결로 얻은 기회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을 꾀했다면, 8·18 합의 이후 울산 비정규직지회를 고립시키려는 사측에 맞서며 투쟁을 구축해 나가는 데 좋은 발판이 됐을 것이다.

그동안 치열하게 싸워 온 조합원들이 정규직화 과정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주장은 매우 당연하다. 앞장서 싸운 이들은 투쟁의 성과를 누릴 자격이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우선' 요구를 내세워서는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일부 신규채용으로 사태를 정리하려는 사측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었다. 단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은 노조 밖에서 상황을 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집행부가 추구하는 신규채용 합의를 반대하며 신규 조합원 조직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신규채용을 거부하며 새롭게 집행부를 꾸린 아산 비정규직지회도 지난해 노조 가입운동을 벌여 조합원 수의 절반 가까이를 신규로 조직했다. 아산 집행부는 이달에 다시 3차 소송을 준비하면서 대대적인 가입운동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노조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금속노조도 이들의 가입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관련 건은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도 현장 발의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활동가들에 따르면, 금속노조 집행부는 이 문제가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안전 철회 제안과 함께 3월 2일까지 노조의 입장을 지회에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금속노조가 올해 사업계획 중 하나로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제 발로 찾아온 노동자들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 가입을 신청한 이들은 노조와 함께 사측의 부당 대우와 탄압에 맞서고 함께 싸워 정규직을 쟁취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단결해 사측을 압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투쟁에 나선 가전·방송통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난 몇 년간 간접고용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했다. 해당 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대학 청소 노동자, 케이블방송통신, 제조업 사내하청, 인천 공항공사, 다산콜센터 등에서 인상적 투쟁이 벌어졌고,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았다.

노동자들이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용감하게 투쟁에 나서면서 은폐돼 있던 간접고용의 심각성이 널리 드러났다. 정부 통계로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87만 명이지만, 정부 통계에는 빠져 있는 3백 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92만 명에 이른다. 인천 공항 같은 공공부문이나 삼성전자서비스처럼 사외 하청(외주업체)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한국의 간접고용 규모는 사내

하청까지 합치면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2015).

한국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대기업들이 적극 활용한 결과다. 대기업들은 고용 비용을 줄이고,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면서도 고용 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외주화를 확대해 왔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을 더 많이 활용하는데, 10대 재벌 대기업의 간접고용(사외 하청 제외) 노동자 규모는 40만 명에 이른다.

지난 몇 년간 바로 재벌 대기업 간접고용 부문에서 특히 인상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삼성전자의 A/S 노동자들, LG·SK의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재벌 대기업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천대하는지를 폭로했다. 노동자들은 형편없는 임금, 성과주의에 입각한 임

금체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하청업체 교체 때마다 고용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재벌 대기업들이 간접고용을 늘린 것은 노동자들의 잠재력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대기업들이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노동자들도 대규모로 집중됐다. 영세 업체가 흔히 그러는 것과 달리, 대기업들이 노동조합을 핑계로 폐업해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A/S나 설치, 고객 응대처럼 중요한 서비스들을 맡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중요성도 커졌다. 원청 대기업은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그럴수록 노동자들의 눈에 '진짜 사장'이 누군지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난다. 대기업은 지벌 여력이 있어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성과를 얻을 여지가 더 크고, 사회적 관심도

많이 받는다. 바로 이런 점들을 활용해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로 조직을 건설하고, 성과를 냈던 것이다.

재벌 대기업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서비스, LG·SK의 통신 비정규직, 티브로드·씨앤엠의 케이블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결의한 것은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희망연대노조 소속 5개 케이블방송통신노조들이 곧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한다.

가전·방송통신의 A/S, 설치 등을 담당해 온 이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비슷하고 재벌 대기업에 간접고용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업체 교체 시 고용·단협 승계, 다단계 도급 철폐, 조합원 불이익 금지,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투쟁

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최근 사측의 공격도 한층 심해졌다. 삼성전자서비스, LG유플러스, 티브로드에서는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활용해 성과주의 임금 체계를 더 강화하고,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찍어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현재 벌어지는 공격에 함께 대응하고, 5~6월에는 공동투쟁을 통해 간접고용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도 이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연대기구 출범 논의를 시작했다. "더 크게 뭉쳐서 더 힘차게 싸우겠다"며 공동투쟁을 결의한 간접고용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보내자.

조명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관련 재판

정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사람에게서 듣기 무서운 법한 이 조항은 일반 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최근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 또한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뒤 2015년 9월경부터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의 집요한 추적(통신사 기록 조회, 금융 정보 조회 등)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재판부에서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나는 당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현실이 너무 답답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거리에 나서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외면할 수 없었

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윤에 눈이 먼 이 사회가 바뀌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생각으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했고,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집회에 참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진상규명을 할 의지조차 없었고, 오히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등 다양한 이유를 가져다가 무거운 형벌을 받게 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야 될 대상은 나를 포함한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경찰이다. 4월 18일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로 나서기 이전에 이미 경찰 병력 1만 4천여 명, 차벽 트럭 18대, 전경버스 등 차량 4백70대를 동원해 광화문 주변을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막았다. 주변 골목마다 진압방패를 든 경찰들이 골목을 막고 사람들이 지나다니

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물론이다. 이미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모든 길을 막아 놓은 상황에서 갈 길이 막히자 도로로 나온 집회 참가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경찰서 경비과장의 해산경고는 위선이었다. 자신들이 도로 통행을 막아 놓고 집회 참가자들 잘못이라니!

또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사냥하듯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퍼부어댔다. 나 또한 캡사이신 농축액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지경이었다. 또한 살수차를 동원해 집회 참가자들을 쓸어버리려는 듯이 물대포를 쏘아댔다. 나중에는 알게 된 사실이지만 캡사이신 농축액에는 파바(PAVA)라는 여러모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섞여 있었다. 물대포를 쏘는 각도 역시 제한이 있지만 경찰은 이것도 무시하고 마구 살수했다. 이런 무차별적 살수는 지난해 12월 5일 한 농민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 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대한



김미경

경찰 폭력이야말로 처벌감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소화기를 분사하는 경찰.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제도적 폭력도 자행되고 있다. 유가족들이 힘겹게 싸워 오면서 얻어 낸 특별법 하에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여당과 정부의 방해 공작에 몇 개월을 기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야 했고, 지금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나는 이러한 울분을 담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고 내가 무죄임을 당당하게 주장할 생각이다. 박근혜 정권은 나를 겁주기 위해서 일반교통방해라는 혐의를 달고 대학생 신분인 나에게는 꽤 무거운 벌금

2백만 원을 부과했지만, 정부에게는 안타깝게도 나는 전혀 겁먹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는 오히려 제대로 싸워야겠다는 의지를 나에게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됐다. 검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습관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기소에 대해 한 방을 날리고 싶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지 며칠 만에 공판기일이 잡혔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

첫 공판은 4월 7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규경 강원대학교 학생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는 2010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 2010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은 한진중공업이 불황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한 데 대해 항의하는 운동이었다.

이후 그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곧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겠다고며 시간을 끌었다.

지난 2월 23일, 이원웅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원웅이 교통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했고, 다른 재판의 판결문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조차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를 “증거”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하겠다며 검사에게 ‘달리 신청할 증거는 없느냐고 재차 물었을 정도로 검찰 측의 대응은 군색했다. 그러고도 검찰은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이원웅의 담당 변호사는 검찰 측의

군색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설령 집회 금지 통고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미 있다는 점, 1심 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는 이원웅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이원웅이 교통을 방해하기는커녕 팻말을 들고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 측 주장이 설득력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원웅은 최후진술을 통해 ‘집

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다수의 삶을 희생시키는 데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살인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낼 권리와 큰 불편 없이 통행할 권리가 충돌하는 구체적 상황에서는, 당연히 전자가 우선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이원웅의 주장처럼,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데 맞선 투쟁과 사회적 연대는 정당하다.

정부·검찰·경찰이 ‘불법 시위’, ‘엄정 대처’ 운운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이러한 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운동의 대의를 옹호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당당하게 주장한 이원웅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항소심 선고는 3월 11일(금)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백은진

이원웅 최후 진술문 “다수의 삶 희생시키는 데 저항한 일은 정당하다”

희망버스 집회는 2010년 12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는데 정리해고 바로 다음 날 대주주와 경영진은 170억 원이라는 거액의 주식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그 고통과 책임을 뒤집어 쓴 노동자들은 어떡했을까요? 정리해고는 당사자에게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2011년에 평택시가 실시한 설문을 보면, 쌍용차 해고·휴직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저에게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공업에 종사하시다 ‘희망 퇴직’을 강요 받아 직장을 그만두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느낀 공포를 저도 목격한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해고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시위에 나선 것은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지켜보지만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서 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세 가지 항소 이유를 듭니다. 첫째, 집회의 제한 통고는 적법했다. 둘째, 적법하게 통고된 제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가 교통 방해를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이 집회가 불법이 됐고 교통 방해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를 하면 당연히 교통은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회와

시위는 민주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 이것은 추상적으로는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사람들에게 책임과 고통을 뒤집어씌우는 것,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살인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큰 불편 없이 통행할 권리와 충돌하는 구체적 상황에서는, 당연히 전자가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그냥 너는 집회에 참가해서 교통을 방해해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해쳤으니 죄인이다’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소수의 배를 불리려고 다수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에 항의하지 못하게 하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실 검찰, 경찰을 떠나 이 모든 것

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도 노동개악이나 세월호, 메르스 사태처럼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앓아가고, 파괴하는 나쁜 정책이나 악법들을 밀어붙일 때마다, 이에 사람들이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려 하면, ‘엄정 대응, 사법처리’ 운운하며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라면 이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 다시 한번 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의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실을 향한 싸움은 계속된다

★ 4·16 대학생 캠프 참가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대학생들이 동참하자!

★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쫓기

★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처

★ 영화 〈귀환〉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최미진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용률 상승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아 왔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돼 미래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30~50대 여성 고용률이 주요 산업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 계층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경제가 악화할 전망 속에서 국가와 기업주의 부담은 최대한 늘리지 않고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여성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 무상보육 부담도 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넘겨 파산 일보 직전이고, 애먼 학부모와 보육교사만 고통을 떠안게 생겼다.

제대로 된 대책은 보육의 질이 좋을 뿐 아니라 보육료도 저렴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육비 지원조차 오히려 후퇴할 지경이다. 이러니, 지난해에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은 1.20명으로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출산율 증대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자, 박근혜 정부는 ‘비취업담’에게 전일 보육을 지원받을 권리를 빼앗았다. ‘3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는 뽐뽐하게도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이 아니라 “한혼·비혼 추세 심화”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력 단절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15~54세의 기혼여성 중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 단절 상태인 사람의 비율은 22.4퍼센트였고, 취업중인 기혼여성 중 과거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비율도 40퍼센트나 됐다(2014년).

경력 단절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경력 단절은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결혼 전에는 비정규직 비율에서 남녀 차이가 없지만, 결혼 후에는 그 격차가 커진다(기혼 남성 33.3: 기혼 여성 60.2). 또한, 경력 단절 경험에 있는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경력 단



학교 비정규직, 대형 마트, 청소 등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 3월 7일 서울시청광장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절 없는 여성보다 55만 원가량 적었다(2014년).

박근혜는 경력 단절을 줄이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는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하지도 않는다. 정부는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늘어났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5.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살인적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은 채 공평한 육아 부담은 몹시 어렵다.

값싼 여성 노동력 양산 정책

대신,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저임금으로 일하면서 육아도 병행하라고 강요해 왔다. 정부의 집요한 시간제 확대 정책의 결과, 시간제 노동자는 2001년 87만 명에서 2015년 8월 2백23만 6천 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시간제 노동자 중 70퍼센트가 여성이다.

박근혜는 전일 노동자가 육아기에 일시적으로 시간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시간제 전환은 미미하고 신규 시간제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학

교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에서 생기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불평등 심화에 기여했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이 모두 전일제 노동자와 격차가 커져 왔다. 특히 시간당 임금의 격차가 더 컸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당 임금만큼은 차별받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비례 원칙’ 보장)고 했지만,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노동자 연대》신문은 일찍이 이를 예상하면서, ‘차별 없는 시간제를 요구하며 조건부로 수용하기보다 시간제 일자리 도입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김하영,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2013년 11월 9일 발행) 설사 ‘비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 할지라도 시간제 노동자는 줄어드는 시간만큼 적은 임금을 받고, 근속에서도 급절로 뒤쳐지기 때문에 저임금 신세를 피할 수 없다.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 지속되면서 임금 격차는 16년 째 거의 변함이 없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1백69만 원)은 남성(2백77만 원)의 6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이 대기업·정규직·고임금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깎는 대신 청년·여성·미조직 노동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 양 두 집단을 이간질해 왔다. 그러나 ‘노동개혁’에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과 파견제 확대가 포함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박근혜는 좀 더 조건이 나쁜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런 비정규직 확대책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특히 민감한 문제다. 얼마 전 발표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그것도 온갖 조건을 들어 소규모만 전환할 예정이다.

얼마 전 여성단체들이 노동개악 법안들과 저성과자 일반하고 지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비정규직 관련 법률만 여성 노동자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여성 노동자들 중에는 생리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할 때 눈엣가시로 찍혀 승진 누락과 해고 위험에 놓인 사례가 여럿 있다. ‘쉬운 해고’가 도입되면 이런 사례가 더 확대될 수 있다.

노동개악 양대 지침 분쇄, 무상보육 국가 책임 강화, 임금 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시간제 일자리 반대, 직장 내 성희롱 반대 등을 내걸고 여성 노동자 처지 개선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잠재력

경제 위기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중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잠재력은 여전하다. 2015년 11월 현재, 한국의 여성 임금 노동자는 8백62만 명이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4퍼센트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지만,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감소 추세다. 여성 노동자 45퍼센트가량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모두 잠시 동안 일하다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여러 해 동안 일한다. 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의 60퍼센트 이상이 상용직이다. 기업주의 입장에서 숙련도가 쌓이기도 전에 노동자들을 계속 교체하는 것은 손해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을 늘리는 이유 하나도 규모가 커진 비정규직 인력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성 노동자들은 조건 개선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할 잠재력이 있다. 교육·공공서비스·보건

의료 등 중요한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에 여성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부 통계로도 전체 비정규직의 30퍼센트 이상이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존재한다. 이것은 정부와 대기업이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결집시키고 있고, 이 때문에 비정규직의 대규모 조직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몇 해 동안 학교비정규직, 대형마트, 대학 청소 등의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조건을 활용해 투쟁을 벌이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여 명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투쟁하면서 싸웠고, 그중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서 일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정부 방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용안정을 따냈다. 홀플러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민주노총 하루 파업에 동참하는 투쟁을 벌였고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함부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의식의 성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노동조합과 함께 싸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1년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의 투쟁은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는 르노삼성자동차 여성 노동자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여성단체들이 지원하는 직장 내 성희롱 소송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누군가가 대신 해방시켜 줘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성 노동자는 스스로 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남성 노동자와 함께 완전한 여성 해방을 이를 열쇠를 쥐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요하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 투쟁하면서 여성 노동자의 의식과 조직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추천 소책자

국제 여성의 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지음. 500원, 24쪽

뼈다귀들을 위한 여성해방 가이드 —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주디스 오어 지음, 이나라 옮김.
3,000원, 91쪽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olidarity.org

추천 책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클라라 체트킨, 블라디미르 레닌, 레온 트로츠키 지음.
13,000원, 272쪽, 책갈피

여성해방과 혁명 — 영국혁명부터 현대까지
토니 클리프 지음, 이나라·정진희 옮김.
15,000원, 463쪽, 책갈피